

정책연구 2009-03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배 상 근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1판1쇄 인쇄/2009년 1월 6일
1판1쇄 발행/2009년 1월 12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ISBN 978-89-8031-524-6

값 5,000원

목 차

<요 약>	1
I. 서 론	19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21
1.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	21
(1) 성장세 둔화 추이	21
(2) 중장기 성장 전망	23
(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국내경기	24
2. 성장동력 위축	25
(1) 투자부진 지속	25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28
(3) 일자리 창출 미흡	29
(4) 수출호조세 둔화	34
3. 내수부진 장기화	38
(1) 소득 증가세 미흡	38
(2) 국내투자 부진 및 해외투자 증가	40
(3) 소비 패턴의 변화	42
(4) 자산 디플레이션	43
4. 금융 불안 심화	45
(1) 금융시장 불안	45
(2) 가계부채 악화	46
(3)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49
(4) 저축은행 부실 우려	49

III. 대외여건 변화	51
1. 글로벌 금융위기	51
(1) 글로벌 금융위기 추이	51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	53
(3) 금융안정화 대책 및 금융위기 전달경로	57
(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부문의 변화	59
2. 세계경제 전망	60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60
(2)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	60
IV. 주요국 성공사례 비교	63
1. 선진경제의 정의	63
2. 미국	65
3. 영국	68
4. 아일랜드	70
5. 스웨덴	72
V. 위기 극복과 선진경제 도약방안	74
1. 단계별 대응방안 모색	74
2. 단기적 위기 극복방안	80
(1) 금융안정화 도모	80
(2) 실물경제 회복	82
(3) 구조조정 추진	83
3.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84
(1) 성장기반 확충	85
1) 자본축적 제고	85
2) 생산가능인력 확보	87
3) 우수인력 양성	88

4) 서비스업 발전	89
(2) 경쟁역량 강화	91
1)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91
2) 부품·소재 산업 육성	93
3)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강화	93
4) 금융산업 육성	95
VI. 결 론	98
참고문헌	102

표 목차

<표 1> 세계 및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성장률 추이	22
<표 2>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	23
<표 3> 주요 기관별 중장기 국내경제 전망 비교	24
<표 4> 중장기 투자 추이	26
<표 5> 실질 설비투자 규모 추이: 1990~2007년	27
<표 6> 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보유 비율	27
<표 7>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추이	28
<표 8>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	29
<표 9>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29
<표 10> 취업자 추이	30
<표 11>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31
<표 12> 산업별 산출액(취업자) 구성 추이	31
<표 13>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추이	32
<표 14> 2000년 산업별 생산 비중·수입의존도·국산화율	33
<표 15> 국민계정의 성장률, 내수 및 수출 증가율 추이	34
<표 16> 경제권역별 수출액 변화	34
<표 17>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36
<표 18>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41
<표 19> 2007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41
<표 20> 가계소비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중 변화 추이	42
<표 21> 가계신용 잔액	46
<표 22>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47
<표 23> 건설사별 미분양 현황	50
<표 24> 2007년 OECD 가입국과 아너스클럽의 1인당 국민소득	64

<표 25>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89
<표 26>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3년 구매력평가 기준)	90
<표 27>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비전 보고서	91
<표 28> 2008년 IMD 주요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96

그림 목차

<그림 1> 우리 경제의 증장기 성장 추이	22
<그림 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25
<그림 3> 최근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	35
<그림 4>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둔화	37
<그림 5>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추이	38
<그림 6> 취업자 증감 및 증감률 추이	39
<그림 7>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GNI) 증가율 추이	39
<그림 8> 설비 및 건설 투자지표 추이	40
<그림 9> 제조업 업황 전망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43
<그림 10> 소비재판매액지수 추이	44
<그림 11> 내수부진 장기화 원인	44
<그림 12>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추이	45
<그림 13>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연결도	48
<그림 14> 미국 연방기금금리 추이	53
<그림 15> 미국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감 추이	54
<그림 16> 미국 경상수지 적자 추이	54
<그림 17> 미국 S&P 케이스-실러 지수 추이	55
<그림 18> 미국 경기동행지수 추이	55
<그림 19> 미국 Dow Jones와 S&P 지수 추이	56
<그림 20> 금융위기 전개과정	57
<그림 21>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65
<그림 22>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67
<그림 23>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69
<그림 24>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71

<그림 25>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73
<그림 26>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77
<그림 27> 한국경제의 위기원인과 대외여건 변화	78
<그림 28> 단기적 위기 극복방안과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79

<요 약>

우리 경제는 최근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커녕 2008년부터 다시 1만 달러대로 주저앉은 실정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대규모의 설비·건설 투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크게 늘리면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기업투자행태 변화, 대출행태 보수화, 가계대출 확대, 경영권 방어 강화, 기업가정신 퇴조, 주력 산업 성숙,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투자의 한계수익률 저하 등에 따라 양적 투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투자효율성이 낮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둔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 위축 요인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자리 창출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 창출 능력 저하, 생산성 향상, 기술진보,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등에 따라 매우 미흡하고, 새로 늘어난 일자리의 질도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우선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로 일자리 창출 부족, 소득 증가 미흡,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의 국내투자 둔화, 해외소비 증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출은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선진국 경제의 침체 지속,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가로의 경기 둔화 확산 등 수출 둔화 요인이 향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호조세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의 하나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지적

할 수 있다. 가계채무상환과 이자비용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주택매물 증가, 주택가격 하락, 담보가치 저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신용경색 심화, 대출이자 상승 및 만기연장 축소가 다시 가계채무부담으로 연결되는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들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증가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중소 건설업계의 부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높이고 있어 향후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면 저축은행의 부실로 연결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 규모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 국가와 기업의 유동성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둔화가 연결되면서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향후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9년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은 V자형 급반등, U자형 완만한 반등, L자형 장기 침체, 새로운 경제체제 모색 등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전망 자체가 다소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여기서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수준인 선진경제 대열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했던 주요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했다.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했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주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금융산업을 육성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그 결과로 미국은 198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진입했고 9년 후인 1997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해 200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영국은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른바 ‘영국병’에 시달렸으며 1970년대엔 오일쇼크로 인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국은 대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으며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과감히 나서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장기간 유지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07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2조8,044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5.1%를 차지하면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3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여 2007년 현재 4만6,099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이다.

변방의 빈국이었던 아일랜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국내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갔고 대규모의 국가부채와 극심한 노사갈등 등이 불안요인으로 지속됐다. 하지만 여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부는 강력한 경제개혁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장기간 추진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노사안정을 유도했다. 영어권 국가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해 외국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했으며 해외인력을 활용하고 국내 실무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창출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국가부채를 줄이고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성장동력을 육성했으며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업경영을 지원했다. 그 결과로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2년 3만 달러를 넘어 2007년 현재 6만209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 됐다.

스웨덴은 1970~1980년대 초반에 생산성 둔화, 실질임금 상승, 오일쇼크, 실업 증가 등으로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2년에 성장을 중시하고 단체교섭을 약화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의 붕괴, 지나친 복지지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시련을 또다시 겪었다. 하지만 1990년부터 전통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금융규제 완화와 기업경쟁을 촉진했으며 R&D 투자의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의 부상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세 차례나 달성한 끝에 2005년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경제난국에 빠져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바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경제난국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위기극복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향후 경제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찾게 되면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 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 보완해서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기반 확충의 근간인 자본축적의 제고를 위해 친시장적인 투자유인체제 구축, 규제완화와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기업가정신 강화,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도시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노령층 고용촉진,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술혁신, 연구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해야 한다.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고등교육기관의 직업능력개발기능과 고급인력 양성 역량 강화, 산업과 기업 수요에 입각한 부문별·수준별 인력양성체계 구축, 평생교육훈련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전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추진, 생산자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투자주도형으로부터 혁신주도형으로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차세대 원천핵심기술의 개발 등과 관련된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며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산·기술·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제조업 입지와 관련된 규제나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보유 및 글로벌 공급기지화 구축, 기술인력, 장비, 정보 등에 대한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등과 부품·소재 기업과의 연계 강화, 혁신기반 확충, 기술개발 및 자금지원 강화,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부품·소재의 기술단계별 정부 역할 정립 등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의 강국이 되기 위해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신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체

제 구축,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양적 확대,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R&D 투자의 지원규모·지원기간 조정, R&D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융합신기술 등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대규모 양성, 해외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국제적인 공동연구나 협력연구 강화, 해외 첨단기업과 글로벌 R&D 센터 유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상당 기간 금융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금융산업이 금융위기에 발목을 잡혀 상당 기간 발전할 수 없으므로 우리도 선진국의 금융산업을 따라잡을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요조건이다. 우선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유형의 정책금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업은 규모별로 대형화·전문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우수한 금융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한다.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 I. 서론
-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 III. 대외여건 변화
- IV. 주요국 성공사례 비교
- V. 위기 극복과 선진경제 도약방안
- VI. 결론

I. 서론

지금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경제는 국민소득, 복지, 삶의 질,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잣대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국민소득을 3만 달러의 경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진경제로의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선진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달성했고 그 사이 물가상승이나 세계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2만 달러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더욱이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또다시 1만 달러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7~8%대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노동공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추세로 총근로시간이 정체되고 있어 노동투입이 향후 크게 부족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교육체계가 미흡하고 여성 및 고령 인력에 대한 활용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자본축적의 측면에서도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수요 측면에서

기업투자행태의 변화로 투자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투자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은행권의 소극적인 기업대출행태가 나타나면서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규제나 제도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의 한계수익률이 낮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보다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정체상태에 있어 아직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개선을 통한 성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여전히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 패턴을 시현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뚜렷한 성장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미흡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경제난국에 빠져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바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선진 대열에 합류한 국가들의 경험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대외여건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난국 극복방안을 마련하며 선진경제의 기준일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도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성장추이, 성장동력, 내수와 수출 등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엄습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와 향후 세계경제 전망을 짚어 본 후, 제Ⅳ장에서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경제난국에 대한 단기적 위기극복방안과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경제의 현주소

1. 우리 경제의 성장 추이

(1) 성장세 둔화 추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7~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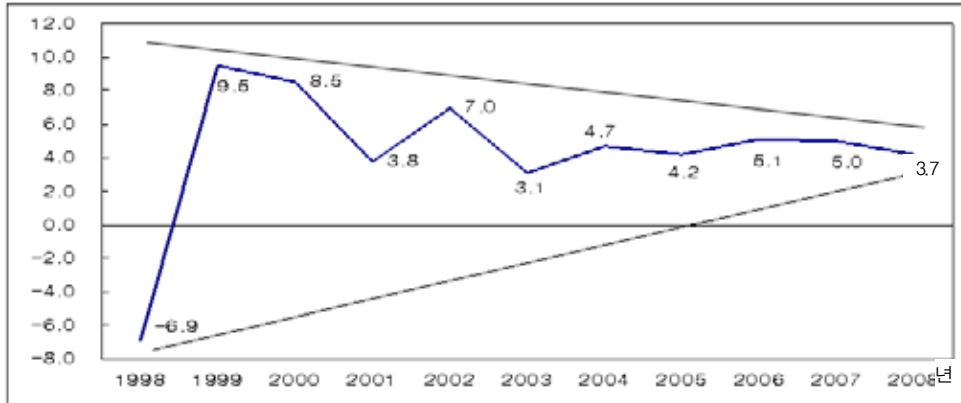
다시 말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7.3%와 8.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에 들어 6.2%로 하락하더니 2000년대에는 4.7%로 급락했다. 더욱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등 비정상적인 기간들을 제외하면 각각 8.3%와 7.4%로 성장률이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마저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향후 몇 년간 성장률 추이는 우리 경제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의 위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였고, 이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

이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한국의 성장률은 5.1%로 대만(4.9%)과는 비슷한 수준이나 홍콩(7.0%)과 싱가포르(8.2%)에 비해 크게 낮다. 2007년에는 홍콩 6.4%, 싱가포르 7.7%는 물론 대만의 5.7%에 비해서도 저조한 5.0%에 불과하다.

1)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2)과 한국은행(2005) 등의 자료를 참조할 것.

<그림 1>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추이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7.30%*	8.74%	6.19%**	4.70%

주: * 1980년 오일쇼크(-1.5%)를 제외하면 1971~1979년 동안 연평균 8.26% 성장.
 **외환위기를 고려하여 1997년(1개년)과 1997년 및 1998년(2개년)의 성장률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7.46%와 7.41%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 세계 및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한국	3.1	4.7	4.0	5.1	5.0
세계	3.6	5.0	4.5	5.5	5.0
홍콩	3.0	8.5	7.1	7.0	6.4
싱가포르	3.5	9.0	7.3	8.2	7.7
대만	3.5	6.2	4.2	4.9	5.7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인 2007년에 2만45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내수부진 지속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 또다시 1만 달러대의 늪에 빠지고 말았고, 2009년에

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 따라서 우리 경제가 3만 달러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만 달러 장벽을 또다시 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표 2>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

구 분	1만 달러	2만 달러
달성 시점	2000년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10,841달러	20,045달러
소요기간	-	7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달러)	10,841	10,159	11,497	12,717	14,206	16,413	18,401	20,045

주: 1995년 1만1,432달러를 달성한 이후 1만 달러대를 유지하다가 1998년 7,455달러로 하락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중장기 성장 전망

국내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2005)는 중장기 경제전망을 통해 2006~2010년 4.8%와 2011~2020년 4.3%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한국은행(2005)도 2005~2014년에 4.6%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도 2005~2010년 5.3%와 2011~2020년 4.1%로 각각 전망하면서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세가 향후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연구원으로는 한국경제연구원(2006)이 2006~2010년에 4.4%와 2011~2020년 4.3%로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2005)는 2005~2010년 4.6%에서 2011~2015년 3.4%로 급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 2008년 1인당 국민소득은 실질성장률 3.7%, 원/달러환율 1,097.02원,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2.5%를 고려할 때 1만7,948달러로 추정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에 대한 기관별 추정치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향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모든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이 요망된다.

<표 3> 주요 기관별 중장기 국내경제 전망 비교

구 분	2006~2010년	2011~2020년	2006~2020년
재정경제부(2006. 5)	4.8%	4.3%	4.5%
한국은행(2005. 8)	-	-	4.6% (2005~2014년)
한국경제연구원(2006. 11)	4.4%	4.3%	4.2%
산업연구원(2006. 1)	5.3% (2005~2010년)	4.1%	4.6%
삼성경제연구소(2005. 6)	4.6% (2005~2010년)	3.4% (2011~2015년)	4.1% (2005~2015년)

주: ()는 기관별 전망기간의 차이를 표시함.

(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국내경기

2008년 9월 중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국내경기는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 동년 8월의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하고 있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9개월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경제에 엄습하기 이전인 2008년 8월 현재 국내경기는 이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기 침체의 골은 깊지 않았을지라도 국내경기의 하강국면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실물경제가 보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구 분	2008. 3	4	5	6	7	8p	9p	10p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100.5	100.4	99.9	99.7	99.4	99.2	98.4
전월차(p)	-0.3	-0.4	-0.1	-0.5	-0.2	-0.3	-0.2	-0.8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3.2	2.8	2.3	1.2	0.1	-0.5	-0.8	-1.3
전월차(%p)	-1.1	-0.4	-0.5	-1.1	-1.1	-0.6	-0.3	-0.5



자료: 통계청,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 성장동력 위축

(1) 투자부진 지속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국내투자는 2001년 이후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계정의 실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합한 설비·건설 투자 증가율이 1970년대에는 무려 32.4%에 달했고 1980년에도 25.2%나 기록하는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크게 늘려 1970~1980년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든든하게 받쳐 주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설비·건설 투자 증가율이 12.0%로 하락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6.2%로 한자릿수의 매우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말았고, 2008년 1~3분기에는 0.4%로 투자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각각 11.3%와 12.9%의 투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더니 1990년대에 들어 3.3%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됐고 이후에도 매우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표 4> 증장기 투자 추이

(단위: %)

구 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7년	2008.1~3분기
설비투자	21.1	12.3	8.7	3.2	-1.1
건설투자	11.3	12.9	3.3	3.0	2.3
설비+건설 투자	32.4	25.2	12.0	6.2	0.4

주: 연평균 설비투자, 건설투자 및 설비+건설 투자 증감률은 1980년 오일쇼크(-19.8, -4.5, -24.3)을 제외하면 1971~1979년 동안 연평균 25.6%, 13.1%, 38.7% 증가. 외환위기를 고려하여 1997년(1개년)과 1997년 및 1998년(2개년)을 제외하면 각각 10.7%, 3.4%, 14.2%와 17.4%, 5.4%, 22.8% 증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설비투자도 최근에 올수록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었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970년대 32.4%, 1980년대 25.2%, 1990년대 12.0%, 2000년대에 들어선 6.2%로 점차 하락하더니 급기야 2008년 1~3분기에는 1.1% 감소했다. 더욱이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2005년에 가서야 실질 설비투자 규모가 78조2,000억 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77조8,000억 원을 겨우 넘어설 수 있었다.

과거 우리 경제는 대규모의 설비·건설 투자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을 크게 늘리면서 높은 성장세를 구현해 왔다. 더욱이 오일쇼크 기간과 외환위기 기간을 고려하면 설비·건설 투자의 증가율은 더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우리 경제를 질적 성장 패턴으로 제대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양적 투입마저 둔화되는 투자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실질 설비투자 규모 추이: 1990~2007년

(단위: 십억 원)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실질설비투자	41,452	47,803	47,967	48,372	60,203	71,226	77,759	70,308	40,586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설비투자	55,513	74,161	67,488	72,556	71,689	74,432	78,672	84,824	91,29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위축된 원인을 살펴보면 투자수요 측면에서 기업투자행태의 변화에 따라 투자수요가 부족한 것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우선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에 불거진 과잉투자 논란, 고위험회피 성향, 경영권 방어, 기업가정신 퇴조, 투자의 한계수익률 저하, 주력 산업의 성숙 등에 따라 현금보유 비율을 늘리면서 투자결정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수익성 저하, 금융기관의 대출 난관 등에 부딪혀 투자수요에 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다.

<표 6> 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보유 비율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기업	10.51	13.87	22.63	27.59	31.68	31.62	29.31	32.52
중소기업	21.07	21.58	21.69	23.67	21.11	24.49	25.96	25.1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투자자금의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권이 기업대출에 대해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은 건전성 등을 강조하면서 대출행태가 보수화되어 기업대출에는 소극적인 반면에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7>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추이

(단위: %)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계대출 비중	25.15	24.55	26.47	27.70	26.42	30.50	34.50	43.85	47.07	47.14	48.85	49.76	49.50	45.2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와 같이 양적인 투자 부족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투자효율성 제고도 미흡하다. R&D 투자의 절대적 금액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세계 첨단산업이나 글로벌 R&D 센터 등의 유치가 부진하며 R&D 투자의 효율성도 아쉬운 실정이다.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우리 경제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앞으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1.7%에서 1980년대 1.2%로 떨어지더니 199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9%를 기록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0.4%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도 1970년대 3.0%와 3.5%, 1980년대 2.2%와 2.5%, 1990년대 1.3%와 1.7%로 점차 낮아지더니 2000년대에는 0.6%와 1.3%로 크게 내려갔다.

출산율 하락, 의료 시스템 개선,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령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전환 중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은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에 도달하는 데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그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8>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7년
인구 증가율	1.69	1.19	0.91	0.44
생산가능인구	2.97	2.22	1.26	0.64
경제활동인구	3.54	2.46	1.72	1.30
취업자 수	3.45	2.74	1.52	1.53

자료: 통계청.

<표 9>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구 분	도달 연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 → 14%	14% → 20%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출처집』, 2003.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둔화되면서 향후 인력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앞으로는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3) 일자리 창출 미흡

최근 일자리 창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08년 11월 일자리 창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불과 0.3% 늘어난 7만8,000명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유입 노동인력을 대략 40만~50만 명으로 추정할 때 취업자 수의 양적인 증가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취업자 수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취업자 수 추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신규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5~29세의 청년층 일자리는 2006년과 2007년에 4.0%와 1.6% 각각 줄어든 데 이어 2008년 내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30~49세의 중년층 일자리는 거의 정체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50세 이상 일자리는 2006년과 2007년에 6.0%와 5.9% 각각 크게 늘어났고 2008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아주 미흡하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조차 50세 이상에 몰려 일자리의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업종별로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경비직, 파출부 등을 포함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일자리의 질도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표 10>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증감차	295	282	264	289	296	278	209	173	141	97	78
증감률	1.3	1.2	1.2	1.2	1.3	1.2	0.9	0.7	0.6	0.4	0.3
15-29세	-4.0	-1.6	-2.1	-1.6	-1.4	-1.2	-2.5	-2.1	-2.7	-3.9	-4.3
30-49세	0.9	-0.2	-0.1	-0.5	-0.4	0.2	0.4	0.7	0.5	0.1	-0.5
50세 이상	6.0	5.9	6.2	6.5	6.3	4.6	4.3	2.5	2.9	3.6	4.6
제조업	-1.6	-1.1	-1.2	-1.3	-1.2	-0.9	-0.6	-0.6	-0.9	-1.5	-1.4
도소매·음식·숙박업	-0.8	-0.6	-1.0	-1.0	-0.2	-0.3	-0.6	-0.7	-0.9	-0.9	-1.4
건설업	1.1	0.8	2.7	1.6	-0.3	-0.5	-1.0	-2.0	-1.8	-2.0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7	4.8	4.3	4.8	5.2	5.0	4.4	4.2	3.9	4.0	3.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실업률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3.5%와 3.2%를 기록한 데 반해 최근에 오히려 오하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 등의 구직단념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실업률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자 수	827	783	851	791	756	734	801	767	752	736	750
실업률	3.5	3.2	3.6	3.2	3.1	3.0	3.4	3.1	3.1	3.0	3.1
15~29세 실업률	7.9	7.2	7.6	7.3	7.1	7.0	7.3	7.4	6.9	6.6	6.8
비경제활동인구증감	227	171	204	141	144	194	270	256	289	337	356
구직단념자	122	108	129	95	108	99	114	104	124	124	125
증감	(-3)	(-14)	(2)	(-19)	(-11)	(-26)	(-15)	(8)	(16)	(30)	(25)
취업수	1277	1321	1485	1173	1341	1287	1521	1187	1314	1266	1327
증감	(40)	(44)	(23)	(36)	(105)	(11)	(36)	(14)	(-27)	(55)	(8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표 12> 산업별 산출액(취업자) 구성 추이

(단위: 전 산업의 비중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농림·어업·광업	4.3 (14.8)	3.0 (13.6)	2.3 (10.5)
제조업	47.1 (23.1)	46.0 (18.7)	46.3 (18.4)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	11.6 (8.4)	9.4 (7.9)	9.5 (9.4)
서비스	34.6 (53.7)	39.4 (59.8)	40.0 (61.8)

주: ()는 취업자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결과』, 2008.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 2008.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것은 경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변화한 것을 들 수 있다.

1995년에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산출액과 취업자 비중이 각각 47.1%와 23.1%였지만 2005년에는 산출액 비중은 불과 0.8%p 줄어든 반면 취업자 비중은 무려 4.7%p나 감소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의 산출액과 취업자 비중도 1995년에는 각각 11.6%와 8.4%였지만 10년 후인 2005년에는 산출액 비중은 1.1%p 감소한 반면에 취업자 비중은 오히려 1.0%p 증가했다. 이처럼 산출액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내려가고 산출액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의 취업자 비중은 늘어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기술진보 등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크게 저하된 점도 일자리 창출을 미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인 취업계수는 1995년 14.8명인 반면에 2005년엔 8.7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표 13>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명, 십억 원)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취업계수 ¹⁾	14.8	10.9	8.7
제조업 ¹⁾	7.5	4.4	3.4
서비스업 ¹⁾	21.9	15.9	13.1
취업유발계수 ²⁾	24.4	18.1	14.7
제조업 ²⁾	19.3	13.2	10.1
서비스업 ²⁾	29.5	21.5	18.4

주: 1) 산출액 10억 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로 노동생산성의 역수임.

2) 최종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 2008.

이를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1995년에는 각각 7.5명과 21.9명이었지만 2005년에 들어서는 각각 3.4명과 13.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취업계수가 크게 낮아졌다.

또한 최종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인 취업유발계수도 1995년에는 24.4명이나 되었지만 2005년에 14.7명으로 9.7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도 과거에는 10만 명이 넘었지만 최근에는 약 5만~6만 명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데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성 향상, 기술진보 등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산업의 국산화율이 저조하고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산된 점도 일조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생산 비중이 낮은 농림수산물(2.7%)과 건설(7.1%)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5%와 3.1%로 낮은 반면에 생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46.5%)의 수입의존도는 21.8%로 높은 편이다. 또한 국산화율도 제조업은 69.9%에 불과한 반면에 농림수산물과 건설은 각각 93.3%와 94.5%로 아주 높은 편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전자 기기(생산 비중 10.2%)는 수입의존도가 32.4%에 이르고 국산화율은 55.5%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14> 2000년 산업별 생산 비중·수입의존도·국산화율

(단위: %)

구 분	생산 비중	수입의존도*	국산화율**
농림수산물	2.7	2.5	93.3
제조업	46.5	21.8	69.9
(전기·전자 기기)	(10.2)	(32.4)	(55.5)
건설	7.1	3.1	94.5
서비스업	39.0	4.8	87.5
전 산업 평균	100.0	13.1	77.0

주: * 수입의존도=(수입 중간재 투입액/산출액)×100

** 국산화율=(국산 중간재 투입액/중간재 투입액)×100

자료: 문소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5.

따라서 완성제품에 대한 중간 투입재의 수입 비중을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조속히 육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흡한 일자리 창출 추이가 빠른 기간 안에 변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수출호조세 둔화

최근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출호조세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2년 경제성장률과 내수 증가율이 각각 7.0%를 기록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내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적이 없다. 하지만 수출은 2005년 8.5%의 한자릿수 증가율을 제외하면 모두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다.

<표 15> 국민계정의 성장률, 내수 및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성장률	7.0	3.1	4.7	4.2	5.1	5.0
내수 증가율	7.0	0.5	1.8	3.3	4.5	4.0
수출 증가율	13.3	15.6	19.6	8.5	11.8	12.1

주: 내수=최종소비지출+총자본형성, 수출=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16> 경제권역별 수출액 변화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가율	2007년 1~10월	2008년 1~10월	증가율
수출액	3254.7(100.0)	3714.9(100.0)	14.1	3026.5(100.0)	3663.5(100.0)	21.0
대전진국	1219.1(37.5)	1266.2(34.1)	3.9	1036.8(34.3)	1127.4(30.8)	8.7
대개도국	2035.5(62.5)	2448.7(65.9)	20.3	1989.7(65.7)	2536.0(69.2)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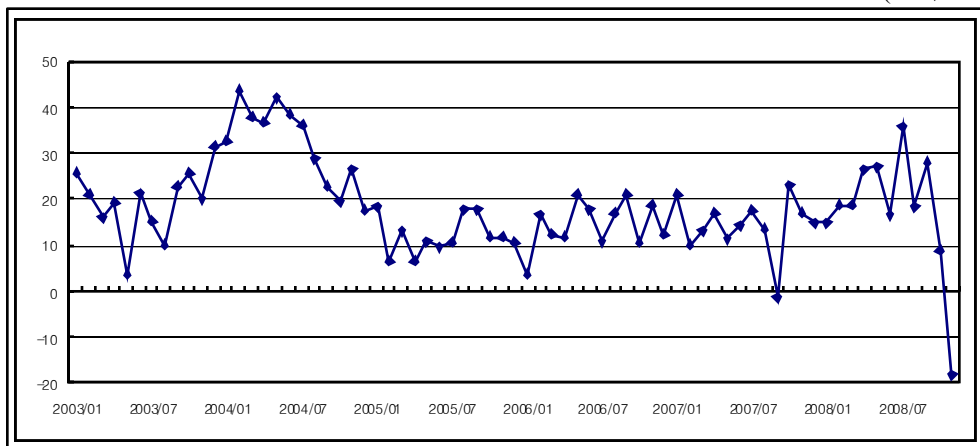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2008년에 들어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어 수출여건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중동, 중남미 등 개도국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노력했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로 수출호조세를 이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 전반에 걸쳐 실물경제의 극심한 위축이 나타나면서 최근 우리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08년 1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9.0%나 감소해서 미국의 IT 거품 붕괴 당시인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기존 수주물량이 많은 선박(35%)을 제외하고 13대 수출품목 모두 감소했고 지역별로도 고유가 지속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된 중동(30.6%)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1~11월 무역수지도 1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10~11월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 둔화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최근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지식경제부.

이와 같은 11월 수출 결과보다 앞으로의 수출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부족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수출

은 환율보다 세계경기에 보다 민감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경제 위축이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수출호조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세계경기의 급락세가 예상되면서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조정폭도 크고 조정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표 17>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기관		연도	세계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
실적치(IMF, 2008. 11)		2007	5.0	2.0	2.1	2.6	11.9
전 망 치	IMF(2008. 11)A	2008	3.7	1.4	0.5	1.2	9.7
	IMF(2008. 10)B	2008	3.9	1.6	0.7	1.3	9.7
	B-A		-0.2	-0.2	-0.2	-0.1	0.0
	IMF(2008. 11)C	2009	2.2	-0.7	-0.2	-0.5	8.5
	IMF(2008. 10)D	2009	3.0	0.5	0.5	0.2	9.3
	D-C		-0.8	-1.2	-0.7	-0.7	-0.8
	OECD(2008. 6)E	2009	1.7*	1.1	1.5	1.4	-
	OECD(2008. 11)F	2009	-0.4*	-0.9	-0.1	-0.6	-
F-E		-2.3	-2.0	-1.6	-2.0	-	

주: * 는 OECD 전체 성장률.
자료: IMF,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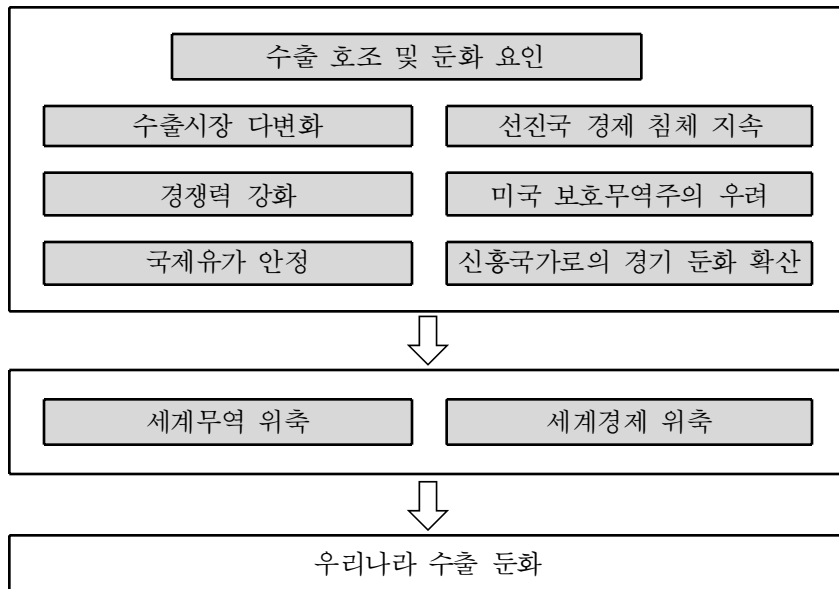
IMF는 2008년 10월에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0.8%p나 하향조정했고 OECD는 6월에 2009년 OECD 전체 경제성장률을 1.7%로 발표한 후 11월 수정 전망에서 -0.4%로 2.3%p나 하향조정했다. 주요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도 IMF는 0.7~1.2%p나 하향조정했고 수정 전망의 기간이 길었던 OECD는 1.6~2.0%p나 낮췄다. 이처럼 2009년 세계경제 위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둔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세계경기에 민감한 우리 수출도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은 적은 반면 대중국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 등이어서 선진국으로의 우회수출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 경제의 침체 지속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도 예상된다.³⁾

여기에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오바마가 보호무역주의를 보다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향후 우리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던 부시 행정부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선거 당시 오바마 당선자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른바 ‘BIG 3’라 불리는 3대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 규제나 지적재산권 강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섬유, 철강 등의 대미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수출호조세 둔화



3) “전체 대중국 수출의 50% 정도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고 25%는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며, 나머지 25%가 중국의 수출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2008년 12월 1일 정재훈 무역정책관의 발언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 국제유가 안정 등과 같은 호조요인도 있지만 선진국 경제의 침체 지속,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흥국가로의 경기 둔화 확산 등의 둔화요인이 향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수출호조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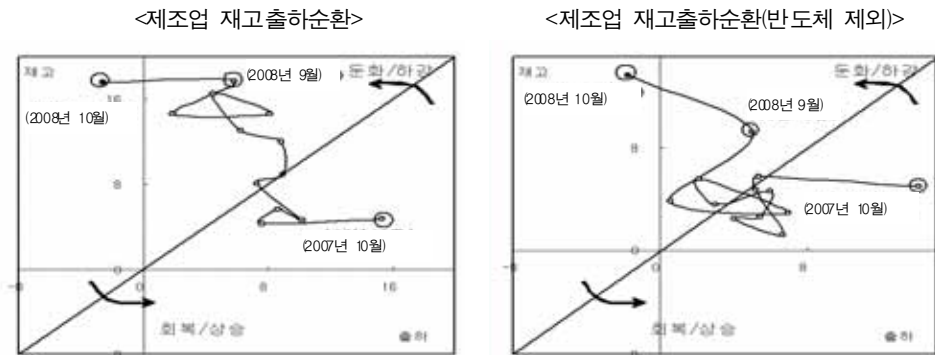
3. 내수부진 장기화

(1) 소득 증가세 미흡

2008년에 들어 내수부진이 지속되었다. 10월의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11개월째 하락해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가 9개월째 동반하락하였다.

이는 현재 국내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도 재고가 늘어나고 출하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경기 둔화·하강 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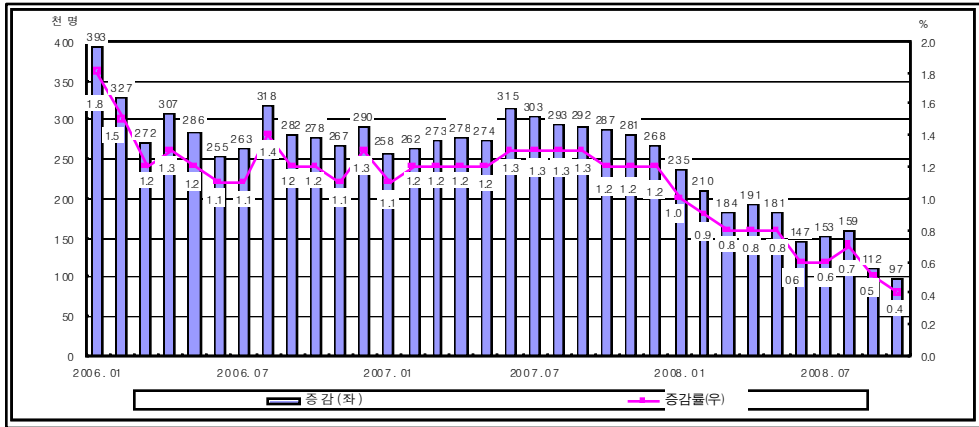


주: 재고출하순환지표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 Y축에 재고 전년동월비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데 쓰임.

이처럼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우리 국민이 일할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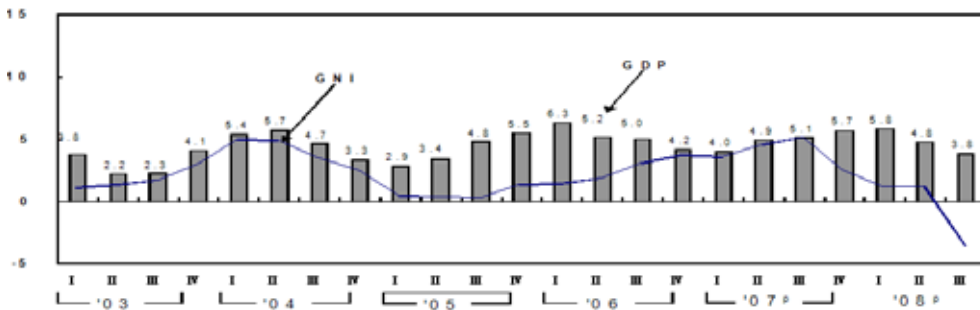
적어 벌어들이는 소득도 작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8년에 들어 취업자 수 증감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2009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6> 취업자 수 증감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GNI)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이런 상황에서 교역조건 악화로 생산에 비해 소득의 증가가 크게 낮아졌다. 2007년 3분기만 해도 경제성장률(GDP 증가율)과 국민소득(GNI)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와 5.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교역조건 악화가 심화되면서 4분기부터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

하더니 2008년 3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3.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3분기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과 국민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5.2%p나 발생했다. 이처럼 일이 많이 해서 생산은 늘어났지만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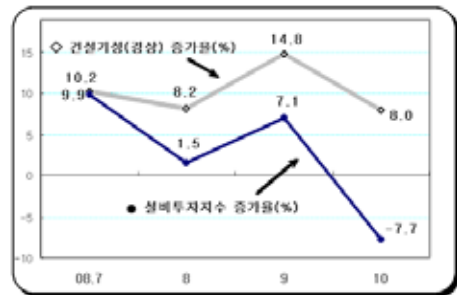
(2) 국내투자 부진 및 해외투자 증가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므로 기업은 고용과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가계의 소득을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 투자부진의 결과로 2008년 1~3분기 설비 및 건설 투자 증가율이 0.4%의 정체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 더욱이 설비투자 증가율은 동기간 동안 전년동기 대비 1.1%나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선행지표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투자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림 8> 설비 및 건설 투자지표 추이

구분	설비 투자지수	기계수주	건설기성	건설수주
2007	8.6	21.1	6.6	19.3
2008. 2/4	0.1	8.8	6.5	-6.1
3/4p	6.1	-7.6	11.1	-22.8
8	1.5	-3.9	8.2	-7.6
9p	7.1	-34.3	14.8	-40.4
10p	-7.7	-36.7	8.0	-23.9



자료: 통계청, 『2008년 10월 산업활동동향』.

이러한 결과는 경기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해외투자의 증가와 국내투자 유인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해외직접투자는 46억 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155억 5,000만 달러로 3배를 넘었다. 하지만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2007년 해외직접투자는 27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105억1,000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의 38.2%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2008년 1~3분기에 들어서도 해외직접투자는 228억 1,000만 달러인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74억2,000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의 32.5%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표 18>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9
해외직접투자	46.3	60.1	64.1	63.5	59.4	81.1	91.7	185.3	274.8	228.1
외국인직접투자	155.5	152.6	112.9	91.0	64.7	127.9	115.6	112.4	105.1	74.2

주: 신고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 인포넷, 『해외직접투자』.

또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세계 203개국 중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 규모가 2006년 50위(48억8,000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59위(26억3,000만 달러)로 순유입 규모의 수준도 부족하지만 등위도 무려 9단계나 추락하고 말았다.

<표 19> 2007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억 달러)

순 위	국 가	순유입 규모	순 위	국 가	순유입 규모
1	미국	2,328.4	8	스페인	533.9
2	영국	2,239.7	10	독일	509.3
3	프랑스	1,579.7	19	싱가포르	241.4
4	캐나다	1,086.6	20	인도	229.5
5	네덜란드	994.4	21	일본	225.5
6	중국	835.2	42	대만	81.6
7	홍콩	599.0	59	한국	26.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이와 같이 경기적인 측면 외에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확대되는 반면에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세금이나 임금 등의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위축되어 내수부진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비 패턴의 변화

내수부진의 한 요인으로 국민의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 가계소비와 국내총생산에 대한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각각 1.6%와 0.8%에 불과했지만 1995년 1.8%와 0.9%, 2000년 2.1%와 1.1%, 2005년 3.2%와 1.7%로 각각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7년도에는 가계소비와 국내총생산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중이 각각 3.6%와 1.9%로 1990년에 비해 2.0%p와 1.1%p나 크게 증가했다.

<표 20> 가계소비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명목	가계소비에 대한 비중	1.6	1.8	2.1	3.2	3.6	3.6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	0.8	0.9	1.1	1.7	1.9	1.9
실질	가계소비에 대한 비중	1.7	2.1	2.1	3.9	4.6	4.6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	1.0	1.2	1.1	1.9	2.2	2.2

자료: 한국은행.

여기에는 국내상품에 비해 해외제품의 질이 높아 국산품 애용이나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외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고 과거와는 달리 외제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는 사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산품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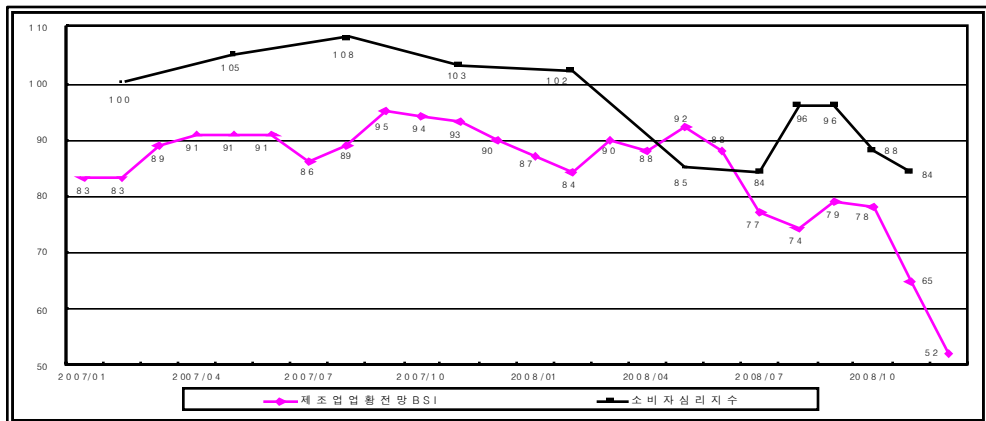
패턴의 변화가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 내수부진을 지속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자산 디플레이션

경기부진과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주가가 크게 떨어져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주가,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소비자심리지수는 2008년 2분기부터 100 아래로 내려간 후 10월에는 84를 기록했다. 여기에 제조업 업황 전망도 100을 넘어서지 못하고 부진한 가운데 11월에는 52를 기록해 기업의 경영여건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그림 9> 제조업 업황 전망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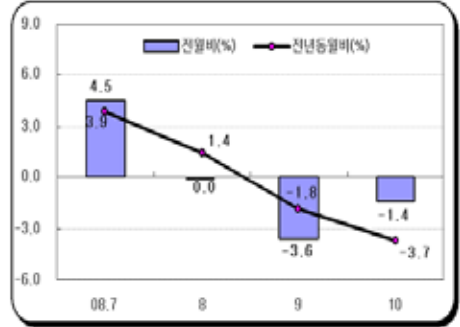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더욱이 앞으로도 부동산가격이나 주식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부진이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 판매 실적도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소비재판매액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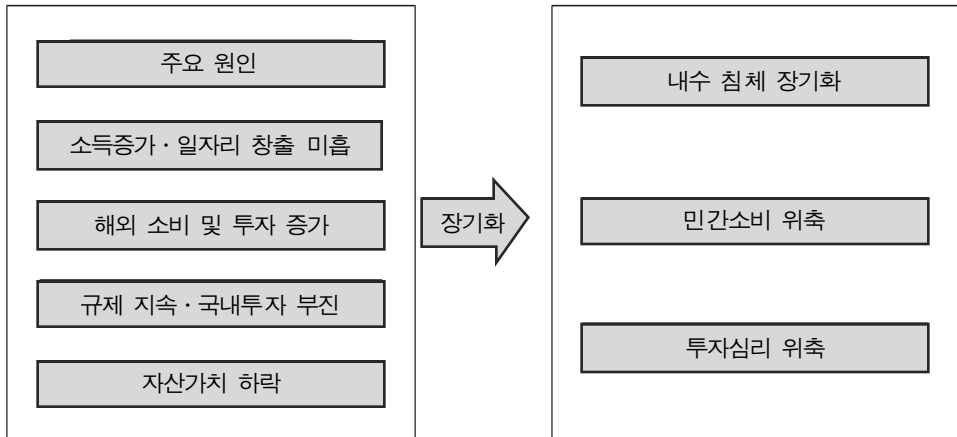
구 분	소비재판매액지수	
	전월(기)비	전년동월(기)비
2007년	-	5.3
2008. 2/4	-1.1	2.5
3/4p	0.0	1.1
8	0.0	1.4
9p	-3.6	-1.8
10p	-1.4	-3.7



자료: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

이와 같이 소득 증가나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가운데 해외 소비와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규제 지속이나 제도개선 미흡 등에 따라 국내투자가 부진하며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내수부진 장기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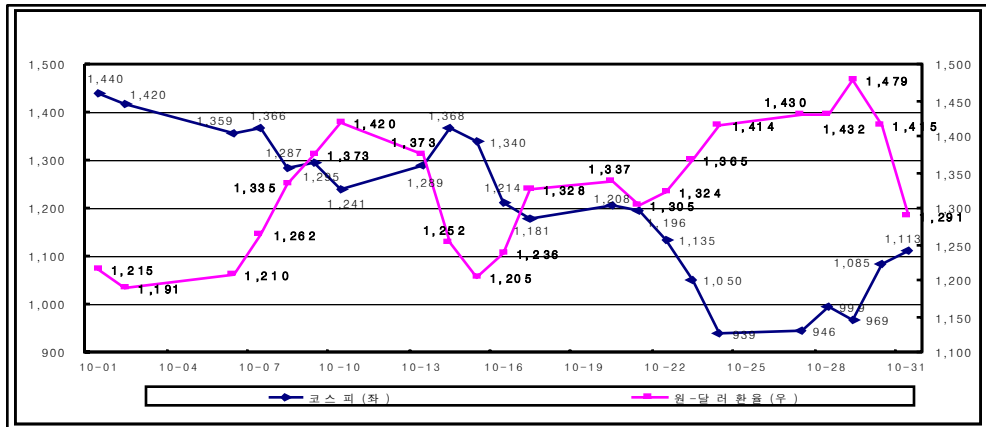
4. 금융 불안 심화

(1)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주식 및 외환 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에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급등 6회와 급락 6회 발동되어 이틀에 한 번 꼴로 등장했다.

이처럼 국내 금융시장은 투자심리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세계경기 둔화, 외환위기 학습효과, 시장쏠림현상 증폭,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냉담한 시장평가, 우리 경제와 통계에 대한 외국의 의구심, 정책 혼선 및 엇박자 등에 따라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Yahoo.finance.

최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 은행채 매입 등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말결산을 앞두고 미국과 유럽계 투자자금이 본국으로 회수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외환보유고 등과 같은 내부의 약한 고리에 대한 의구심이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은 조그만 충격에도 일중, 일간, 주중, 주간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몇 년 동안 무리하게 몸집 불리기에 집착한 일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이나 건전성 미흡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우리 금융시장의 쏠림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인 가운데 향후 주가회복과 함께 ‘펀드 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2) 가계부채 악화

국내금융시장의 약한 고리의 하나로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2008년 6월 말 가계신용과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660조3,000억 원과 622조9,000억 원으로 2000년 266조9,000억 원과 241조1,000억 원에 비해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각각 2.5배와 2.6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표 21> 가계신용 잔액

(단위: 조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가계신용	266.9	341.7	439.1	447.6	474.7	521.5	582.8	630.7	660.3
가계대출	241.1	303.5	391.1	420.9	449.4	493.5	550.4	595.4	622.9
판매신용	25.8	38.2	47.9	26.6	25.2	28.0	31.5	35.3	37.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8년 6월 말 45.0%로 2007년 12월 말 43.3%에 비해 1.7%p나 올랐으며 미국(2007년 말 32.2%), 일본(22.5%), 영국(36.6%)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신용대란 당시인 2002년 46.5%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2004년 말 1.27배에서 2005년 말 1.35배, 2006년 말 1.43배, 2007년 말 1.48배에 이어 2008년 6월 말 1.53배로 빠르게 늘어났다.

한편 2008년 8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03조 원으로 최근에 올수록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자릿수로 안정되고 있다. 이는 예금은행의 가계대

출 잔액에서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대출의 증가세가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이나 미분양주택 증가 등에 따라 안정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최근에 올수록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안정되는 듯 보일지라도 내용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각각 3배가 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9% 수준에 이르고 있다.⁴⁾ 따라서 최근 이자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과 자산 모두가 부채의 1/3 수준에 불과한 가구는 부실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2>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단위: 십억 원, 전년동월 대비 %)

구 분	2006 12월 말	2007년			2008년		
		7월 말	8월 말	12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가계대출 잔액	443,348.2 (12.7)	455,971.5 (9.6)	460,929.6 (9.8)	474,097.5 (6.9)	494,957.3 (9.2)	498,822.4 (9.4)	503,099.9 (9.1)
예금은행	346,222.3 (13.3)	352,543.9 (8.3)	355,903.6 (8.5)	363,680.9 (5.0)	376,970.1 (7.5)	379,360.3 (7.6)	381,537.8 (7.2)
<주택대출 ¹⁾ >	240,951.4 (15.6)	243,260.9 (8.4)	243,726.9 (7.9)	245,763.5 (2.0)	248,748.4 (2.4)	250,506.5 (3.0)	251,063.1 (3.0)
비은행 금융기관	97,125.9 (10.7)	103,427.7 (14.0)	105,026.0 (14.8)	110,416.6 (13.7)	117,987.2 (15.4)	119,462.1 (15.5)	121,562.1 (15.7)

주: 1) 주택담보대출('주택 관련 대출' 및 '주택 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분'도 포함)+주택 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

2) ()는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08년 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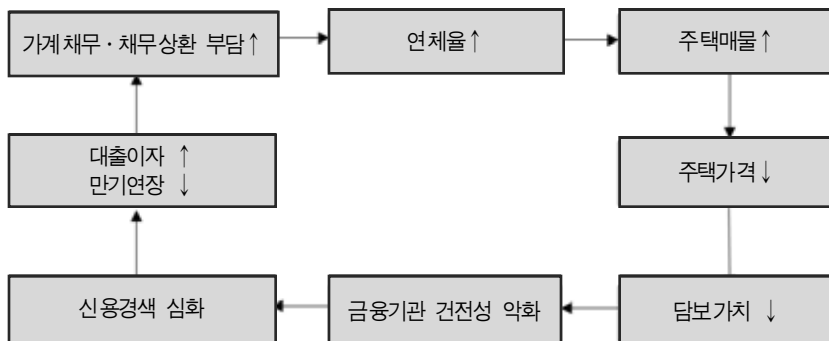
4) 유경원(2008)을 참조할 것.

여기에 가계의 이자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은 2003년 말 6.9%에서 2005년 말 7.8%, 2006년 말 9.3%, 2007년 말 9.4%에 이어 2008년 6월 말 9.8%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증가율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10% 이상을 이자비용으로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가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가계 부실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008년 초부터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은 최근에 올수록 외환위기 시기와 거의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의 추가 하락 기대나 이자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평형 갈아타기’나 주택구입시기 지연 등이 예상되어 향후에도 부동산가격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연결도



따라서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대출이나 이자비용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하락은 민간소비의 부진은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즉, 가계 채무상환과 이자비용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주택매물 증가, 주택가격 하락, 담보가치 저하,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신용

경색 심화, 대출이자 상승 및 만기연장 축소가 다시 가계채무부담으로 연결되는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기관의 담보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전혀 배제하기는 힘들다.

(3)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금융시장 불안이나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에 금융기관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대출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악화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을 10등급으로 나눠 하위 4등급(7~10등급) 기업은 2008년 6월 말 33.5%로 2007년 말에 비해 5.4%p나 증가한 반면, 상위 4등급(1~4등급) 기업은 6월 말 24.1%로 2007년 말에 비해 6.3%p나 감소해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줄어들고 나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중소기업대출이 2008년 1~7월 중 평균 5조9,000억 원 늘어났으나 8월과 9월에는 각각 2조6,000억 원만 증가했다. 이에 10월 제조업의 자금사정 BSI는 70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나 하락했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또한 KIKO 손실 확대로 일부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중소기업 부도는 321건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 저축은행 부실 우려

미분양주택 증가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건설업계 부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2007년 말 11만2,000호에서 2008년 3월 13만2,000호, 6월 14만7,000호에 이어 8월에는 15만7,000호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또한 일부에서는 건설협회가 해당 기업에 대한 문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특성상 과소계상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실정이다.

<표 23> 건설사별 미분양 현황

건설사	미분양 수	미분양자금	업계 순위
GS건설	7,000가구	2조5,000억 원	4
대림산업	5,000가구	2조5,000억 원	5
대우건설	5,000가구	1조7,000억 원	1
현대산업개발	4,000가구	1조6,000억 원	7
두산건설	2,000가구	1조 원	11

2008년 10월 말 현재 건설사별 미분양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업계 순위 4위인 GS건설의 미분양주택 수는 7,000가구로 약 2조5,000억 원의 미분양자금을 나타내고 있고, 대림산업의 경우도 5,000가구와 약 2조5,000억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⁵⁾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분양주택 증가나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이다. 2008년 1~11월 건설업체 부도 수는 365건으로 작년동기 대비 40.4%나 급증했고 중소건설업체의 은행대출 연체율은 2008년 6월 말 2.26%로 2007년 12월 말 1.46%에 비해 0.80%p나 증가했다.⁶⁾

이와 함께 부동산가격 하락이나 미분양주택 증가 등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향후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면 저축은행의 부실로 연결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5) 2008년 11월 17일 SBS뉴스를 참조할 것.

6)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이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정부와 금융권은 자율적인 대주단 협약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Ⅲ. 대외여건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1) 글로벌 금융위기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그 예단이 보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원지인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3월 14일에 발생한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텨스(Bear Sterns)의 유동성 부족 사태로 볼 수 있다.

이에 16일 연방준비은행이 300억 달러를 지원해서 제이피모건(JP Morgan)이 Bear Sterns를 주당 2달러에 인수하게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또한 17~18일에 유럽 400억 유로, 영국 50억 파운드, 일본 4,000억 엔, 호주 3억8,300만 호주달러 등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이 일단 안정되었다.

또한 7월 초 미국 양대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추가적인 부실 발생 전망에 따라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금융시장이 동요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7월 13일 양 기관에 대한 크레딧 라인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연방주택금융청을 신설하는 등 긴급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듯 보이면서 미국 서브프라임 채권과 이에 관련된 파생상품의 부실이 잘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일부에서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9월에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채권과 이에 관련된 파생상품의 부실이 악화되면서 투자은행 등 대형금융회사의 연쇄 부실로 연결되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9월 14일 미국 3대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보호신청을 냈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의 파산임박설이 확산되었다.

이에 연방준비은행은 15~16일 1,400억 달러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고 AIG에 8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재무부도 19일 향후 2년 동안 7,000억 달러의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는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를 도입하고 예금보험한도를 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시가평가를 일시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1, 2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22일 지주회사로 전환해 2000년 최대 금융세력이었던 5대 투자은행이 이제 자취를 감추었다.

하원 통과에 실패했던 긴급경제안정법안(EESA)이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 악화되자 10월 1일 상원을 먼저 통과한 후에 3일 하원을 통과했다. 7일에는 연방준비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로 했으며, 재무부는 TARP의 7,000억 달러 중 2,500억 달러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9개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기로 해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은행의 부분 국유화가 추진됐다. 시장원리에 의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사태 추이의 심각성과 시장실패라는 인식에 따라 미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영국의 모기지기관인 HBOS, 브래드퍼드 앤드 빙글리(Bradford & Bingley), 독일의 부동산 지주회사 히포(Hypo Real Estate), 유럽계 은행인 포티스(Fortis), 텍시아(Dexia) 등이 인수 합병, 구제금융 지원, 파산, 국유화 등을 통해 정리됐다. 10월 8일 미국 등 7개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제히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13~14일 미국은 유럽, 영국, 스위스, 일본 등의 중앙은행과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으며, 13일 영국과 유로지역 15개국 정상들이 모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11일 15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 정상들이 모여 금융규제 강화와 내수부양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G20 정상 공동선언을 발표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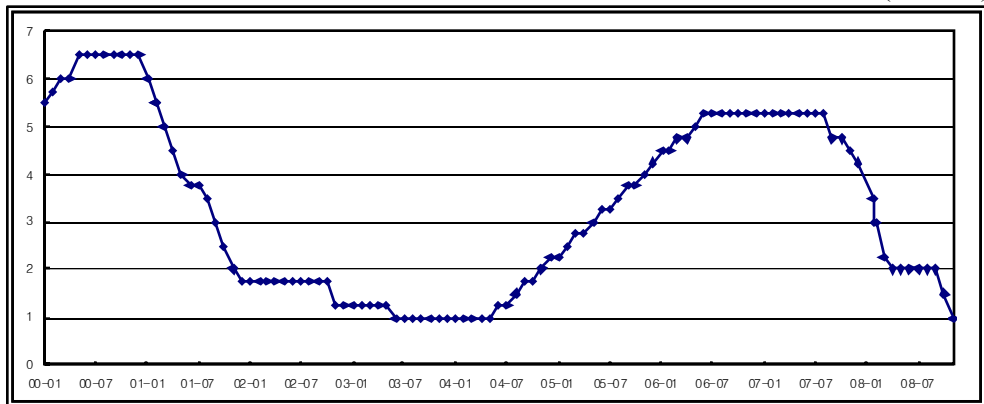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배경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90년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용자 관련 규정의 완화를 들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이 손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규정을 완화해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⁷⁾

여기에 2000년에 6.50% 수준이었던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연방준비은행은 200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해 2003년 6월에는 1.00%까지 내려 불과 2년 6개월 만에 13차례에 걸쳐 5.50%p나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규정 완화로 부동산가격 상승과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림 14> 미국 연방기금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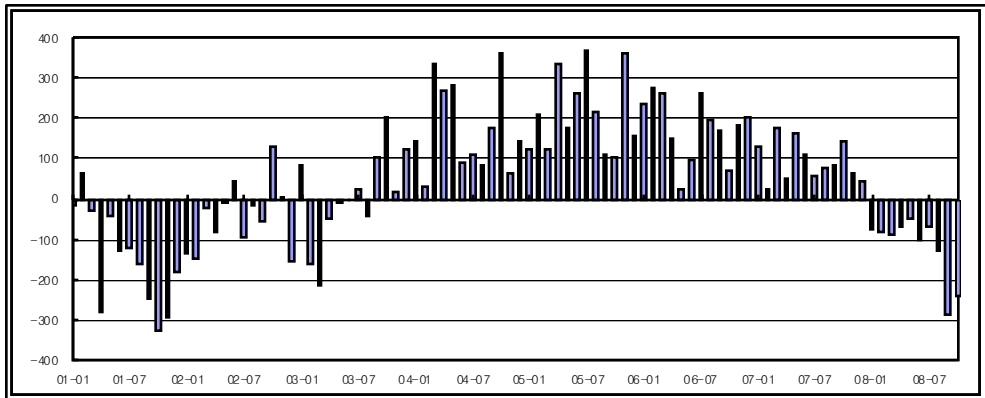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7)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존슨(Johnson)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주창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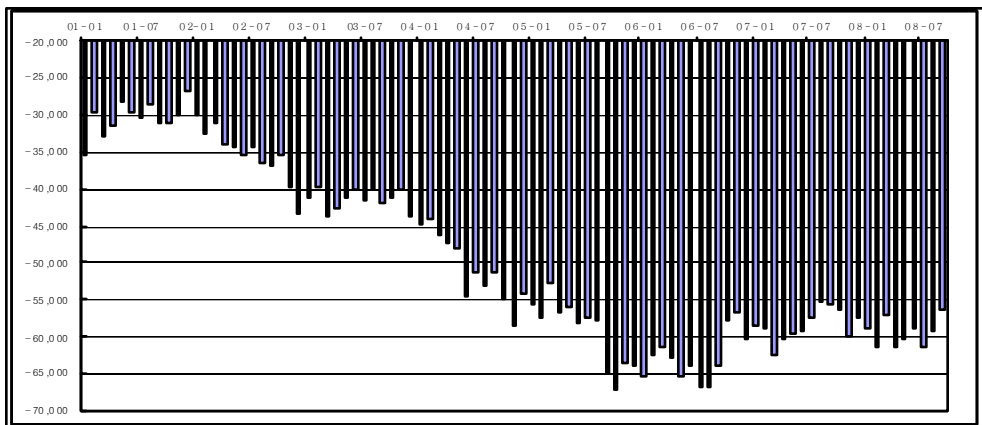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부동산가격이나 주식가격 등에 거품이 끼면서 경기과열을 우려한 연방준비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0.25%p씩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연방기금금리가 1.00%에서 5.25%로 무려 4.25%p나 올라가는 급격한 긴축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유동성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또한 미국 국내경기 부진이 시작되면서 2005년 말부터 비농가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2008년 1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10월에는 전월 대비 24만명이나 감소했다.

<그림 15> 미국 비농가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그림 16> 미국 경상수지 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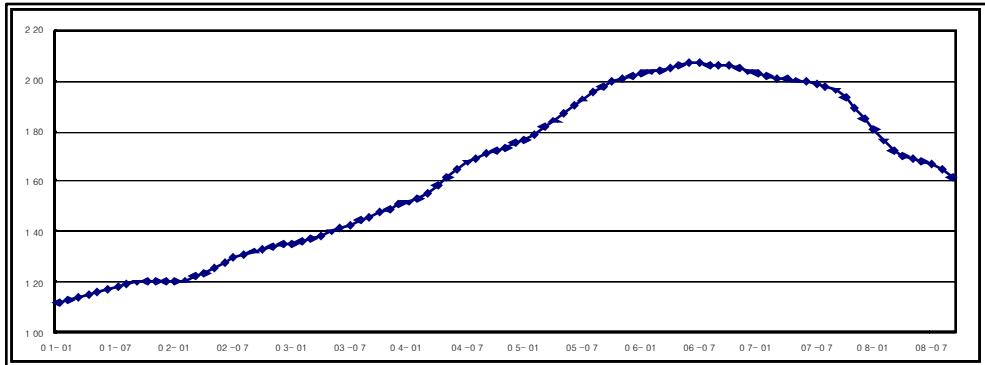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이와 같은 시중유동성 축소와 취업자 수 감소는 가계소득을 줄이고 이자비용부담을 늘려 민간소비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경상수지는 2005년 10월 671억 달러 적자에서 2008년 9월 555억 달러의 적자로 116억 달러나 적자가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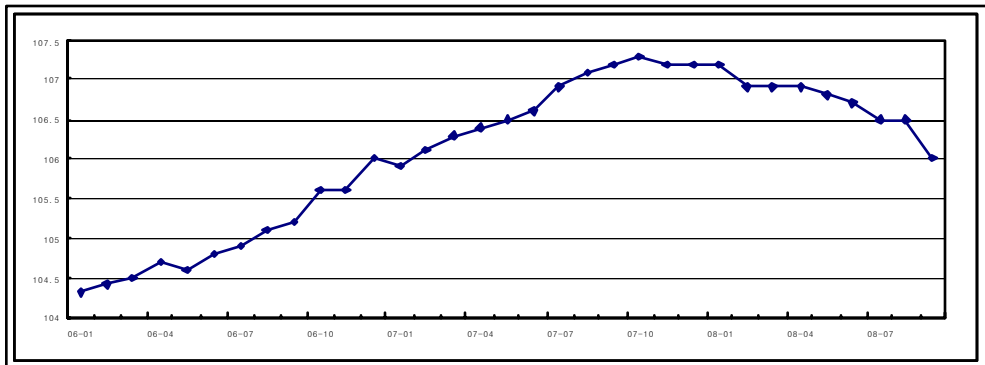
고용 및 소득 감소, 이자비용 증가, 민간소비 위축 등은 2006년 중반부터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주택가격이 고점이었던 2006년 7월에 S&P 케이스-실러 지수가 206.5에서 2008년 9월 161.6으로 무려 21.8%나 하락했다. 치솟기만 했던 미국의 부동산가격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거품이 붕괴된 것이다.

<그림 17> 미국 S&P 케이스-실러 지수 추이



자료: S&P(Standard&Poor's).

<그림 18> 미국 경기동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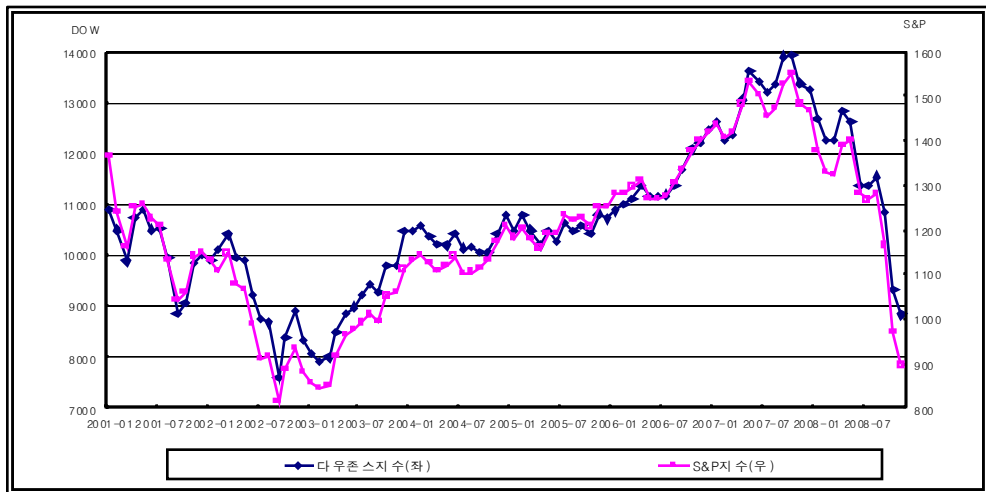
자료: U.S.Department of commerce, BEA.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취약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중심으로 부실이 시작되었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도 부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했던 모기지 보증업체나 투자은행 등을 중심으로 부실화되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기관들이 건전성보다는 수익성에 치중해서 무리하게 파생상품을 운용했고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도 금융위기의 또 다른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국내경기는 2007년 10월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지속하게 되었고 주식시장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다우존스(Dow Jones) 지수와 S&P 지수는 각각 42.2%와 36.6%나 하락했고,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금융시장 패닉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른바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시장의 최대 시련으로 볼 수 있다.⁸⁾

<그림 19> 미국 Dow Jones와 S&P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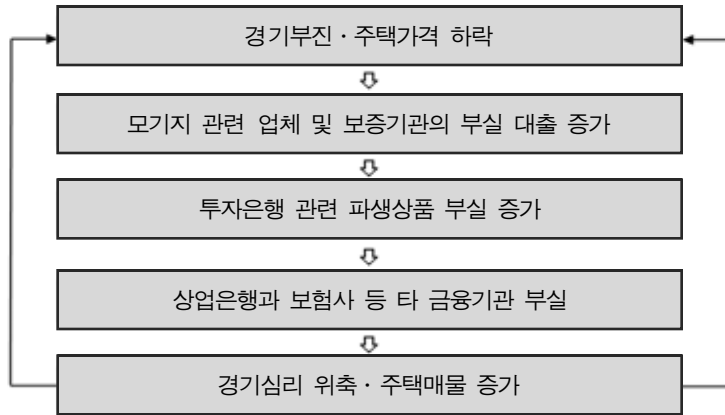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 관련 규정 완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지속과 연이은 급격한 긴축정책으로의

8) 그린스펀(Greenspan) 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쓰나미로 비유했다.

전환, 경기부진 지속, 주택가격 하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 부실, 금융감독 당국의 안일한 관리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연결된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은 경기부진과 주택가격 하락이 모기지 관련 업체와 보증기관의 부실 대출을 증가시켰고, 이는 투자은행 관련 파생상품을 부실화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한 상업은행과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도해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패닉 상태를 초래했다. 이는 경기심리 위축과 주택매물 증가로 연결되어 또다시 경기부진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0> 금융위기 전개과정



(3) 금융안정화 대책 및 금융위기 전달경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정부 등은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다. Bear Sterns, AIG,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의 경우와 같이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들 수 있다. 1980년 말 저축대부조합 연쇄파산 당시에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추후에 되파는 작업을 했던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1991~1993년 스웨덴에서 나타났던 금융위기 당시 스웨덴 정부가 일부 은행의 국유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했던 방안인 은행의 (부분) 국유화도 있다. 2008년 10월 13일 영국과 유로지역 15개국 정상 공동조치에서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 은행 국유화 방안은 유로지역 국가도 아닌 영국의 고든(Gordon) 총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영국식 모델 또는 고든 모델로 불리고 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들 수 있는데, 10월 8일 7개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공조를 펼친 바 있다. 최근 금리인하의 특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해 과거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 방식(Greenspan's baby step)과는 달리 과감한 금리인하 폭을 보이면서 시장에 정책당국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들 사이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달러 공급을 크게 늘리는 달러화 유동성 공급 확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별 국가와 기업들이 달러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달러화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리고 비은행권의 소비자부문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이다. 미국 재무부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나 정리신탁공사 설립방안 등은 이미 발생한 부실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향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적은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비은행권의 소비자부문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금융안정화 대책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부실채권의 정확한 규모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전 세계적인 확산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서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4)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부문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금융규제 강화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 연쇄파산 등과 같은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에는 금융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몇 년 동안은 금융 혁신이나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의하면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분석한 과거 세계 금융위기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가 침체를 거쳐 회복되는 시점까지 약 3년 반에서 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⁹⁾ 또한 Claessens *et al.*(2009)은 1960~2007년 동안 OECD 21개국이 경험한 122개의 경기 침체를 분석한 결과, 정점에서 침체에 도달하는 기간만도 약 4분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¹⁰⁾ 이외는 달리 Bordo *et al.*(2001)은 지난 120년간에 걸친 위기들을 분석하고 경기 둔화(economic downturn)가 약 2~3년 동안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실물부문이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추세 성장률이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Goldstein *et al.*(2000)은 약 18개월, Reinhart and Rogoff (2008)는 약 2년, Allen and Gale(2007)은 약 4년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면 실물부문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침체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금융산업이 금융위기에 발목을 잡혀 상당기간 발전할 수 없게 되므로 우리도 선진국의 금융산업을 따라잡을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을 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 만큼 민간주도로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로 나설 발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금융기관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우리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9)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참조할 것.

10) 침체에 깊이에 따라 짧게는 2분기, 최장 13분기까지 이룬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Claessens *et al.*(2009)을 참조할 것.

2. 세계경제 전망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 규모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유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연말에 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이후 시가평가를 일시 유예하고 있는 것은 파생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그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2008년에 나타난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은 파생상품에 의한 것도 있지만 유럽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나타난 부분이 커서 앞으로 파생상품의 부실에 따른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더욱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으로의 파급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와 기업의 유동성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둔화가 연결되면서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향후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9년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온 중국도 한자릿수 성장률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IMF는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을 2.2%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OECD는 OECD 전체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은 크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고 시나리오별로 각각 두 가지 정도의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V자형 급반등을 예상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V자형 급반등 시나리오는 국제적 공조하에 금융 불안이 조기에 수습되고 2009년 상반기에 미국 부동산가격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한다는 바람을 담은 전망인데 그 가능성은 다소 작아 보인다.

다음으로 U자형 완만한 반등을 예상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해소되는 데 1~2년이 소요되고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미국 주택가격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2010년 중에 세계경제가 회복의 기회를 모색한다는 시나리오다. 여기에는 미국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미국 채권을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미국에 공급하는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가 조기에 복원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global re-imbalance).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하나로 L자형 장기 침체를 들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적극적 공조를 통해 금융위기가 1~2년 만에 안정을 찾을지라도 세계경제 둔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4~5년 동안 실물경제가 침체상태에 놓여 세계적인 경기부진이 장기화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임밸런스가 조기에 복원되지 못하고 새로운 글로벌 밸런스(global re-balance)를 모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브레턴우즈 시스템을 대체하는 국제금융질서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담은 내용이다.

또 다른 비관적인 시나리오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극히 가능성이 낮은 전망이다. 국제적 정책공조가 무산되고 금융 불안이 지

속되면서 실물경제의 침체를 동반한 복합불황이 장기화되어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말아 새로운 경제체제를 모색해야만 하는 시나리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둔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전망 자체가 다소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매우 불확실한 예상이다. 하지만 대체로 U자형 완만한 반등이나 L자형 장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U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의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럴 경우에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미국의 주택가격이 앞으로 10~30%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2008년 12월 1일 전미경제조사국(NBER)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13개월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6.7%로 3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더욱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에는 실업률이 7.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10%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과 소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부문이 2009년에는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2008년 12월 현재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0~0.25%로 향후 금리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제로금리 수준에 놓여 정책수단의 고갈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선행지수는 2007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어 미국 부동산 모기지 시장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의 경기회복 기회는 2009년은 지나야 모색해 볼 수 있고 세계경제의 위축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기 세계경제는 U자형과 L자형의 중간 형태의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IV. 주요국 성공사례 비교

1. 선진경제의 정의

선진경제(advanced economy)를 단순한 수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국민소득, 복지, 삶의 질, 환경, 교육, 문화, 기대수명, 소득불평등도, 문맹률 등 다양한 잣대를 이용하여야 선진경제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경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개별 국가의 선진화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선 한국선진화포럼(2007)은 국가 리더십, 공동체 자유주의, 동북아 구상 및 세계전략 등을 바탕으로 선진적 권력체제, 신경제발전체제, 사회통합, 복지체제 등을 구축하는 것을 선진화로 정의하고 있다.¹¹⁾ 정책기획위원회(2006)는 지속가능한 선진화의 기틀을 갖추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을, 전상인(2007)은 국가발전 모델에 있어 후기발전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윤창현(2007)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삶의 질을 영유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하는 것을 각각 선진화로 정의했다¹²⁾. 이처럼 선진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넓은 개념으로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규정하기 어렵다.

개별 국가의 선진화는 물론 선진경제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등은 다음과 같이 선진경제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선진경제(advanced economies)로 각각 32개국과 35개국을 분류하고 있다.¹³⁾ 세계은행(World Bank)은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ies)로 65개국을 지정하고 있다.¹⁴⁾

11) 한반도선진화포럼(2007)과 <http://www.hansun.org/>를 참조할 것.

12) 정책기획위원회(2006), 전상인(2007), 윤창현(2007)을 각각 참조할 것.

13) 국제통화기금은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08/02/weodata/groups.htm#ae>를, 미국 중앙정보국은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appendix/appendix-b.html>을 각각 참조할 것.

14) 세계은행의 “Country Classification”을 참조할 것.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은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0.9 이상인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⁵⁾ 최근 연구에서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를 아너스클럽(Honor's Club)으로 분류하여 선진국으로 간주하기도 했다.¹⁶⁾ 2007년 기준 OECD 3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는 총 21개국이며, 2007년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850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의미가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표 24> 2007년 OECD 가입국과 아너스클럽의 1인당 국민소득

(단위: 달러)

순위	국가명	1인당 국민소득	순위	국가명	1인당 국민소득	순위	국가명	1인당 국민소득
1	룩셈부르크	103,124.99	11	미국	45,725.35	21	뉴질랜드	30,390.06
2	노르웨이	83,484.79	12	오스트리아	44,851.95	22	그리스	28,151.78
3	아이슬란드	64,547.72	13	캐나다	43,674.04	23	포르투갈	21,081.67
4	아일랜드	60,208.95	14	호주	43,163.27	24	한국	20,015.34
5	스위스	58,513.24	15	벨기에	42,617.63	25	체코	16,956.41
6	덴마크	57,136.73	16	프랑스	42,033.94	26	슬로바키아	13,857.47
7	스웨덴	49,602.51	17	독일	40,400.40	27	헝가리	13,744.91
8	핀란드	46,856.05	18	이탈리아	35,745.17	28	폴란드	11,072.50
9	네덜란드	46,774.46	19	일본	34,296.06	29	멕시코	9,716.71
10	영국	46,098.56	20	스페인	32,089.78	30	터키	9,569.0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선진경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개별 국가의 선진화 정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 중에서 경제적 측면만으로 제한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 수준으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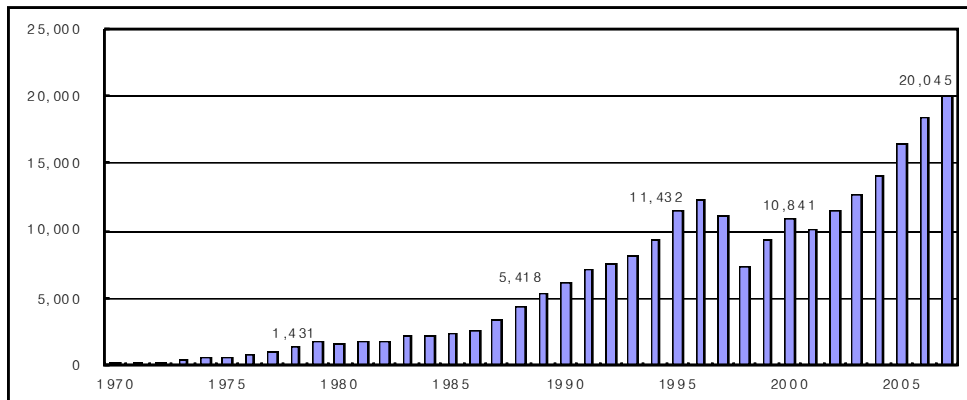
15) 유엔이 발표한 최근의 HDI 순위는 <http://hdr.undp.org/en/statistics/>를 참조할 것.

16) 주원(2007)을 참조할 것.

어울리는 것을 선진경제 진입 여부로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은 1953년 67달러에서 1977년에 1,000달러, 1989년 5,000달러, 1995년에 1만 달러를 각각 넘어 2007년에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내수부진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또다시 1만 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또다시 넘어 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 우리보다 먼저 선진 대열에 합류한 주요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단위: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인당 국민소득(달러)	10,841	10,159	11,497	12,717	14,206	16,413	18,401	20,04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던 미국경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반면에 물가는 급등하는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 지나친 복지정책, 노동자에 대한 과보호 등의 결과로 1970년대에 들어 재정은 고갈되었고 과도한 정부규제와 함께 낮은 저축률로 인해 투자가 늘지 않았다.

1980년에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유시장원리와 공급경제학에 기초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과 자산세율을 인하했으며 복지정책을 축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바로 발현되지 못해 1990년대 초까지는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IT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고 이후에도 낮은 성장 속에 고용이 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겪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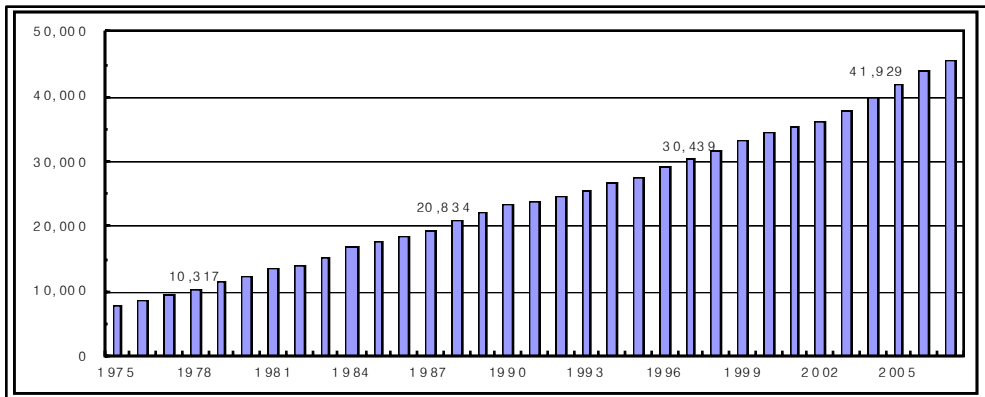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조업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 강화 등과 함께 금융업의 육성을 도모했다. 2000년에 “국가 나노이니셔티브(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를 수립하여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핵심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006년에는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America Competitiveness Initiative)”를 주창하여 물리, 화학 등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2배나 늘리고 창업 촉진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으며 유연한 직업훈련장짜를 신설하고 투자환경을 정비했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법과 원칙’ 그리고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노조도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구조 조정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교육이나 고용에 있어 인종, 성, 나이 등과 같은 차별요소를 혁파하고 필요한 인재를 능력에 따라 활용하는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했으며 지역사회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특히 NCLB(No Child Left Behind) 정책 등과 같은 소외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SAGEP (Student Achievement Guarantee in Education Program)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켜 저학력층 인적자원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조8,076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25.3%를 차지하면서 일본 GDP의 2.8배, 독일의 4.2배나 되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현재 4만5,725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1978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한 미국은 10년 후인 1988년에 2만 달러, 9년 후인 1997년에 3만 달러를 각각 돌파했고 200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시대에 진입했다.

<그림 22>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구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달성시점	1978년	1988년	1997년	2005년
1인당 국민소득	10,317달러	20,834달러	30,439달러	41,929달러
소요기간	-	10년	9년	8년

주: 1980년 이전 자료는 WEO, september 2002를 참고하였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October 2008.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점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자유시장원리 강조,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복지지출 축소, R&D 투자 촉진, 국가주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추진과 신성장동력 창출, 노동시장의 안정성 및 유연성 제고,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영국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활동과 사회복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여 정부는 비대해졌고 민간경제활동은 위축되었다. 높은 물가상승률, 낮은 생산성, 빈번한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허덕였다. 또한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소위 ‘영국병’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오일쇼크로 인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도 했다. 1979년에는 13.4%의 물가상승률, 98억 파운드의 재정적자, 130만 명의 실업자를 기록하면서 영국은 곧 주저앉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79년에 집권한 대처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추진해 복지와 재정의 지출을 축소했고 공기업을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장기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976년에 74만 8,000명에 달했던 중앙정부 공무원이 1994년엔 53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임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등 노동개혁을 통해 투쟁성이 강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노사안정과 우수한 기업환경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직업훈련 자격증제도(NVQ)를 정비해서 인력 양성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을 지원했다. 1979년 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을 30%로 인하했고 1988년엔 11단계의 누진세율 적용구간을 25%와 40%의 두 단계로 축소했다.

대처 정부의 출범 초기 3년 동안은 새로운 경제환경과 정책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다. 하지만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노사 불안, 산업공동화, 영국병 등의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어 갔고 안정적인 물가수준과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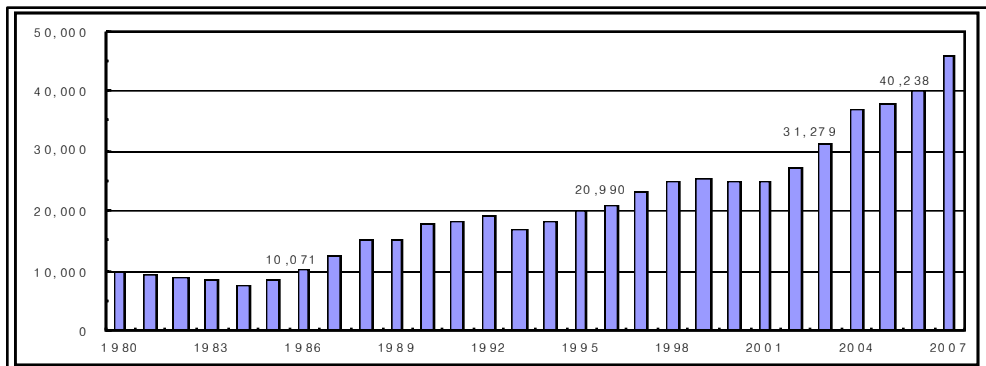
또한 외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차별정책을 철폐했고 규제완화와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업, 사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유럽 최대 금융시장으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2003년 ‘바이오사이언스 2015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해 세계 2위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럽의 생명공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첨단기술의 개발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07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2조8,044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5.1%를 차지하면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내총생산 규모는 일본의 0.6배, 독일의 0.8배, 미국의 0.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86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진입한 영국은 10년 만인 199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03년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7년을 소요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인 200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2007년 현재 4만6,099달러로 세계 11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과감한 조치들을 통해 영국은 다시금 강대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선진경제를 달성했다.

<그림 23>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구 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달성시점	1986년	1996년	2003년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10,071달러	20,990달러	31,279달러	40,238달러
소요기간	-	10년	7년	3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영국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확립, 성장우위의 경제정책 기조 수립, 사회보장과 재정지출의 축소, 과감한 민영화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금융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다.

4. 아일랜드

변방의 빈국에 불과했던 아일랜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대공황으로 인해 국내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국내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산업기반이 취약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의 국가부채, 극심한 노사갈등, 높은 물가수준 등이 아일랜드의 불안요인으로 지속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은 12~13%에 이르렀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사분규가 연평균 140여 건을 상회했으며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1985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123%에 달했다.

하지만 여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정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시도해 나갔다. 선성장·후분배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987년에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해 엄격한 노사관계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노사안정을 유도했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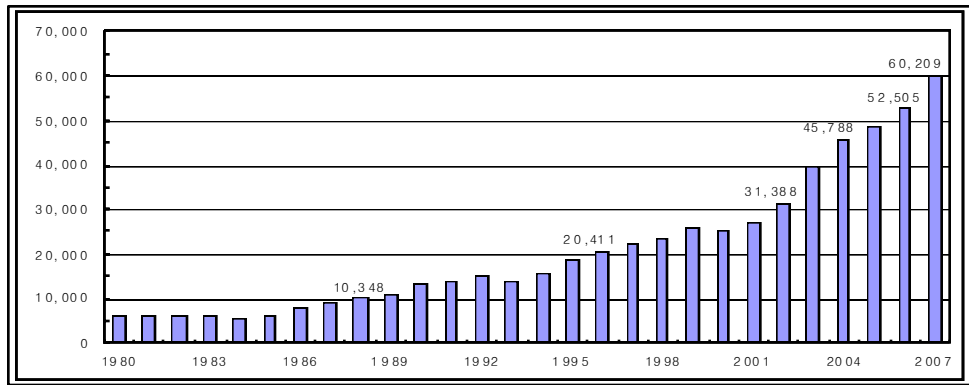
공공부문을 줄이고 국가부채의 축소에 노력하는 동시에 영어권 국가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무역자유화, 규제완화, 적극적인 외자유치, 이민자 순수입 유도 등을 통해 외국기업을 원활하게 유치했고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창출했다. 또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을 통해 이공계 실무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했고, 1990년대부터 대학무상교육 등을 추진해서 해외로 나갔던 인재들을 다시 국내로 귀환시켜 산업인력으로 활용했다.

또한 수출목적 제조업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낙후지역 투자, 직업교육, R&D 비용 등에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했으며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1985년 50%에 달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5년 1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업경영을 지원했고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같은 기간 동안 65%와 60%에서 42%와 20%로 각각 낮췄다. 외국인직접투자와 R&D 투자를 확대하여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산업을 육성했고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에 노력했으며 국제금융센터(IFSC) 등을 구축하면서 금융 서비스업과 사업 서비스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았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2007년 현재 국내총생산이 2,612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전체 GDP의 0.5%를 차지하게 됐고 세계 31위의 소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1988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하고 8년 뒤인 1996년에 2만 달러에 진입했던 아일랜드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2002년에 3만 달러, 2004년 4만 달러, 2006년 5만 달러를 단숨에 돌파했다. 5만 달러에 진입한 지 불과 1년 만인 2007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6만209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 됐다.

<그림 24> 아일랜드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구 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달성시점	1988년	1996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10,348달러	20,411달러	31,388달러	45,788달러	52,505달러	60,209달러
소요기간	-	8년	6년	2년	2년	1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아일랜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파트너십 강조, 선성장·후분배의 사회협약 체결, 노사안정 주도, 공공부문과 국가채무 축소, 무역자유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인력 활용 및 국내 실무인력 양성,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R&D 투자 확대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과감하게 추진했던 점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5. 스웨덴

스웨덴은 1970~1980년대 초반에 생산성 둔화, 실질임금 상승, 오일쇼크, 실업 증가 등으로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77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저성장세 지속으로 인해 2만 달러 달성은 요원해 보였다.

하지만 스웨덴은 복지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권을 보장했던 1938년 잘츠요바덴 협약의 정신을 살려 1982년에 성장을 중시하고 단체교섭을 약화하는 등의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했다. 198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경쟁 촉진을 유도했고 소규모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등주식제도도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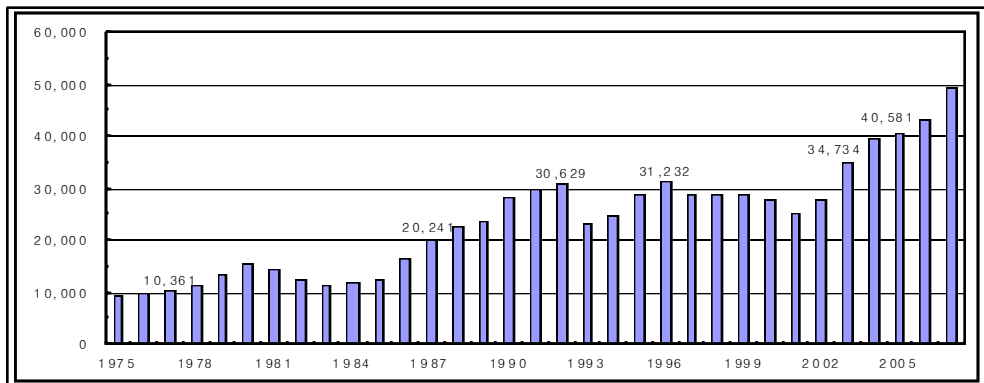
이에 따라 1977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10년 만인 1987년에 2만 달러를 이룩했고 불과 5년 후인 1992년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부동산가격의 거품 붕괴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 결과로 1992년에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했지만 그 다음 해인 199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166달러로 곧바로 추락했다. 이에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일부 주요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해 갔다. 하지만 지나친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높아져 고소득자들이 이민을 떠나고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부 나타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몇 년 주기로 오가는 등 성장이 정체하는 시련을 겪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스웨덴은 1990년부터 전통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R&D 투자의 활성화와 에릭슨(Ericsson)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부상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사회를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 계획의 성인교육안을 추진해서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업자 대상의 수준별 전업 성인교육을 실시했다.

결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세 차례나 달성한 끝에 2005년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할 수 있었다. 2007년 현재 스웨덴의 국내총생산은 4,548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8위 경제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림 25>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구 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달성시점	1977년	1987년	2003년	2005년
1인당 국민소득	10,361달러	20,241달러	34,734달러	40,581달러
소요기간	-	10년	16년	2년

주: 1980년 이전 자료는 WEO, september 2002를 참고하였음. 1992년과 1996년 각각 3만629달러, 3만1,232달러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다시 2만 달러대로 하락하였고, 2003년 3만4,734달러를 달성하였음.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2, October 2008.

스웨덴은 성장위주의 사회협약 체결, 금융규제 완화, 기업경쟁 촉진, R&D투자 활성화, 정보통신산업 육성, 성인교육 강화 등을 기반으로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V. 위기 극복과 선진경제 도약방안

1. 단계별 대응방안 모색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경제난국에 빠져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곧바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⁷⁾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어 향후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생산가능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힘든 가운데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수출호조세마저 약화되면서 경제를 견인할 부문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어 경제의 성장동력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투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부진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국민소득 증가나 일자리 창출도 미흡하다. 게다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고 해외소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부동산가격이나 주가 등이 하락하는 자산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내수부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금융시장 내부의 약한 고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과 소득 증가 둔화는 가계 부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미분양주택 증가나 부동산가격

17)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위기관리, 미래준비, 경제 재도약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락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심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은행권도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중장기적인 정책인 선진경제 도약방안을 바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바로 모색하기에 앞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지지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다음 단계로 향후 경제가 안정을 찾게 되면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 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제IV장에서 살펴본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 보완해서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¹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인 투자활성화와 질적인 투자효율성을 높이면서 자본축적을 제고해야 한다. 여성과 노령 인력을 활용하고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여 우리 경제가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 육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으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의 경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일 무역수지 개선은 물론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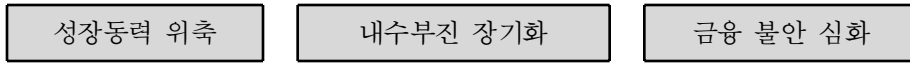
18)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리더십이나 사회협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경제적인 정책들로만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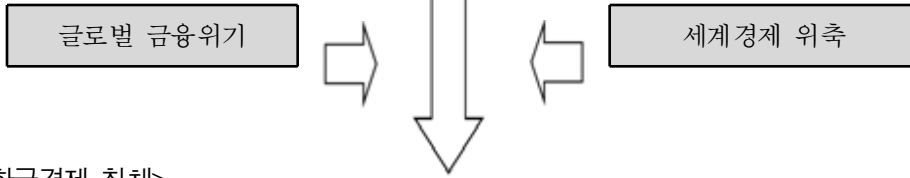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경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6>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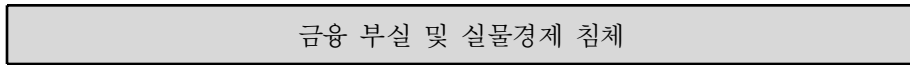
<위기의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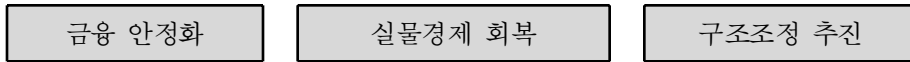
<대외여건 변화>



<한국경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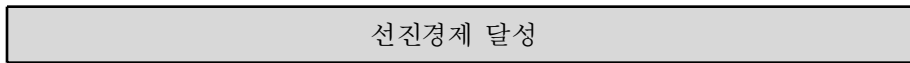
<단기적 위기대응방안>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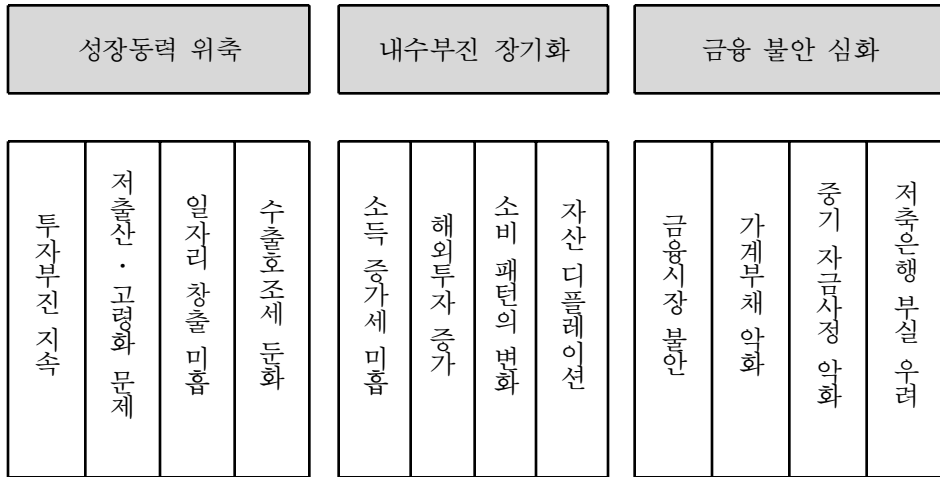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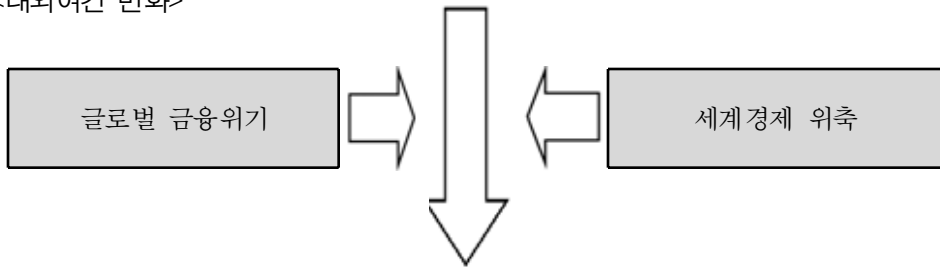


<그림 27> 한국경제의 위기원인과 대외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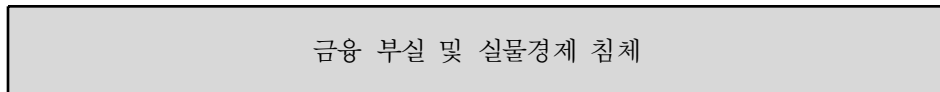
<위기의 한국경제>



<대외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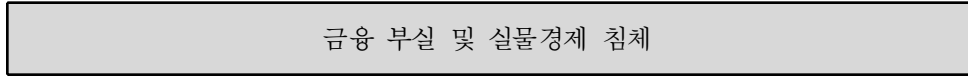


<한국경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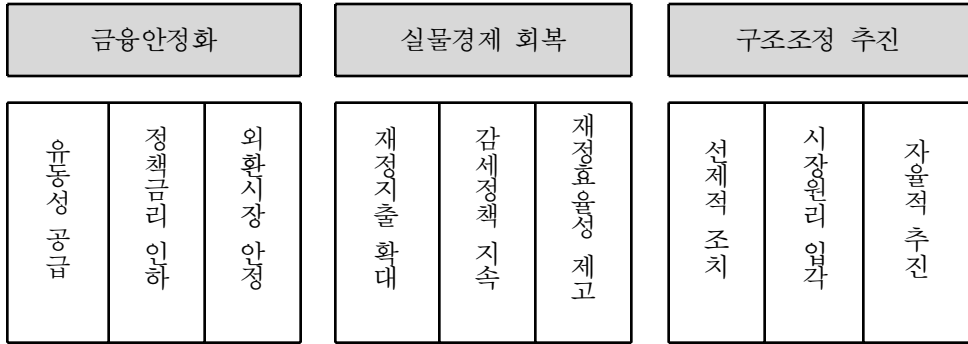


<그림 28> 단기적 위기 극복방안과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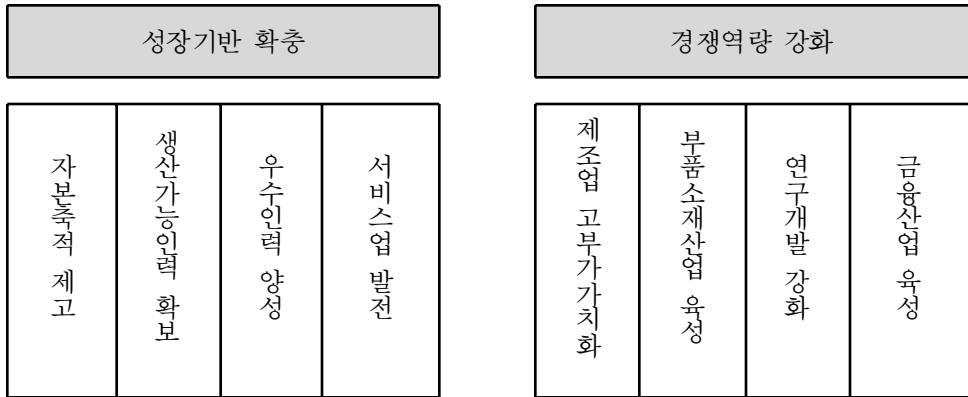
<한국경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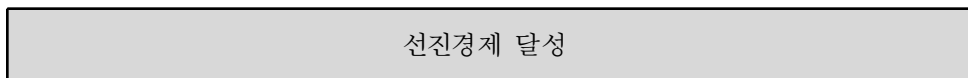
<단기적 위기대응방안>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우리 경제의 선진경제 달성>



2. 단기적 위기 극복방안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기에 앞서 경제난국 극복을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안정화를 도모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모색하면서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강화,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정책 일관성 유지, 강력한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 표명, 부처 간 의견이 사전에 조율된 정책발표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금융안정화 도모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원화 및 달러화 유동성을 과감하고 신속하며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2008년 12월 11일 한국은행이 1.0%p나 파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대규모로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제적으로 경기급락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내외 정책금리 차이를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정책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이 큰 폭의 금리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내외 정책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5

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위축으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기업과 은행의 리스크 프리미엄과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된 폭만큼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책금리의 인하로 시장금리가 소폭이나마 낮아진 만큼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가계와 기업의 추가적인 부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정책금리의 인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시적인 정책과 현장감 있는 정책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¹⁹⁾

또한 우리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저축은행의 PF대출, 중소기업의 자금흐름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주택투매 등에 따른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완화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게 공급되는 유동성으로 인해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인과 금융기관의 사적인 계약이나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보상 또는 지원한다거나 인위적으로 단기적인 증시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부실기업 정리나 회생가능기업 지원 등과 같은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외화차입보증이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특성과 함께 세계적으로 달러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계 기업이 연말결산을 앞두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투자자금을 유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율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안정될 때까지 외환시장에 대한 외환

19)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매입한 것이나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 등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당국의 개입은 가능한 자제되어야 한다. 다만 급격한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외환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변동성을 줄이는 수준에서 외환시장에 매우 제한적으로 개입(smoothing operation)할 필요는 있다.

(2) 실물경제 회복

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급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정적 경기대응기능을 과감하게 강화해야 한다. 세계경기 둔화와 같은 대외여건은 주어진 조건으로 내수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감세정책도 소비와 투자를 개선하고 시장왜곡이 적은 가운데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좋은 정책이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계획되어 있는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급락을 완화해서 경제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취약계층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재정지출을 가능한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소비 확대를 위해 고용사정을 예측하고 개선하며 경기부진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²⁰⁾

2009년 성장 패턴이 상저하고형으로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 6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²¹⁾ 여기에 2009년 상반기에도 경기회복의 기운이 가시화되지 않고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되 그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온 결과로 IMF 기준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33.2%(2007년 말)로 미국의 60.8%, 일본의 195.5%, 독일의 63.2%, 프랑스의 64.0%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OECD 기준으

20) 한국경제연구원(2008)을 참조할 것.

21) 재정의 상반기 집행률은 2006년 53%, 2007년 56%, 2008년 50% 수준이었다.

로도 우리는 29.4%(2007년 말)로 OECD 평균인 75.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편이다. 게다가 유로존의 ‘성장과 안정 협약(Growth and Stability Pact)’도 개별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의 3%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009년 수정예산안의 재정적자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2.1%에 불과하다. 여기에 2008년 10월 IMF도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각국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²²⁾ 새로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사업 타당성, 효율성, 활용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출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정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세,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정비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과세 대상자를 넓혀 세입기반을 보다 크게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이나 경쟁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R&D 투자나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3)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이란 기업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수익성 등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영역, 조직, 인력, 채무나 재무상태 등을 재조정해서 부실한 부문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핵심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살아남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한 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우리 경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해 실물경제 침체

22) OECD(2008)는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하면서도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로 번져가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2008년 10월 부도기업 수는 321개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미분양주택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부실이 실현되기 이전에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살려 향후 발생할 부실처리비용을 줄이고자 대주단 협약이나 패스트 트랙 등과 같은 사전적인 기업구조조정(프리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부실화된 기업이 아닌,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인기에 영합한 발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무조건 살려내는 지원에만 매달린다면 향후 우리 경제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정치논리를 지양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자율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산업, 개별 산업의 기업, 대기업집단의 기업, 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3. 중장기 선진경제 도약방안

우리 경제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찾게 되면 중장기적인 선진경제 도약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²³⁾ 우선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23)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얼마만큼 높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경제를 언제까지 달성한다는 식의 로드맵(road map)은 제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보여 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 보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인 투자활성화와 질적인 투자효율성을 높이면서 자본축적을 제고해야 한다. 여성, 노령층 인력을 활용하고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여 우리 경제가 필요한 생산가능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 양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려면 제조업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해야만 한다.

또한 경제의 경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중심 산업인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신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개발을 강력히 추진해 미래세대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²⁴⁾

(1) 성장기반 확충

1) 자본축적 제고

국내투자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노동투입과 생산성이 과거 수준과 유사하다면 투자 증가세의 둔화는 자본축적 부족으로 직접 연결되어 성장잠재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에 비해 투자 증가율이 높게 유지되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자본, 금융자본, 국내자본, 해외자본 등과 같은 자본의 성격이나 출처에 따른 차별이 없는 투자활동의 천국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24) 서비스산업 발전이나 금융산업 육성 모두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인프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산업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로, 금융산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산업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우선 친시장적인 투자유인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을 주는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보다 낮추는 동시에 각종 비과세나 감면세를 가급적 줄여 세수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투자자금의 여력이 큰 대기업의 투자가 활발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공장총량제 등과 같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해외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을 정비해 국내외자본에 차별이 없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올수록 크게 둔화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행정 및 요청 사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조세경쟁에 부응하도록 세제를 정비하며, 외국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교육, 환경, 의료, 문화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글로벌 선진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인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맹목적인 반부자 정서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과 부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업인 스스로도 기업가정신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에 나서야 한다.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협상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이 생산성, 향후 수익성 등에 기초해서 근로자의 채용, 해고, 근로조건, 업무전환 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시의 추진여건을 개선해서 대규모 투자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업보다 정부가 원하는 지역이나 사업에 대해 기업도시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기업도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또한 기업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생 수익의 가급적 많은 부

분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며 해당 지역의 인력을 가능하면 많이 고용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생산가능인력 확보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인 생산가능인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요망된다.

우선 의료 발전, 생활환경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추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노령층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해 노령층이 일할 능력을 갖추어도 기업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노령층 채용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 제도 등을 확산시키고 노령층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을 조건으로 정년을 연장시키며 노령층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활동 참여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채용, 승진, 인사 등에 있어 여성차별을 없애고 직장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출산휴가 등 제도적 장치나 인프라를 개선해 여성의 고용을 늘려야 한다.

또한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낮추고 경력 단절의 문제점을 보완해 출산에 대한 부담요인을 개선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생산가능인력을 무한히 확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양적인 노동투입이 제한되더라도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연구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3) 우수인력 양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부족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경제성장 역량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현재 전체 인력 규모면에서는 공급과잉이면서도 부문별로는 초과 인력수요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 인력의 약 80%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여 우리 사회는 고학력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다양화되고 있지만 폐쇄성 등과 같은 교육체계의 한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부문별로 공급과 수요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필요한 우수 핵심인력이나 세부 분야에 적합한 인력은 크게 부족해 질적 불일치(mismatch)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양성정책의 기초는 교육개혁을 통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개혁은 대학입시 등을 포함한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진척이 더디고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수요에 비해 세부적인 인력양성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연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 준 입시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전문화를 추진하고 입시제도도 만들 수 있도록 대학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평가 강화,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성화 학교 확대, 교육 개방 등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직업능력개발기능과 고급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인력 양성과 기술개발기관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과 조직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또한 산업과 기업 수요에 입각한 부문별·수준별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부부문별, 수준별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필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등에 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융합기술 분야 인력의 확보나 서비스업과 금융업 분야에서의 선진기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양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연구인력개발 중에서 특히 IT 부문의 우수 설계인력과 연구기획 및 관리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도 요망된다.

4) 서비스업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조업에 의존한 성장전략이 과급효과, 고용, 성장동력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5>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연평균 %, %p)

국 가	1980년대	1990년대	변화
벨기에	0.91	0.95	↑
캐나다	0.59	1.25	↑
덴마크	0.87	1.13	↑
핀란드	1.63	1.63	-
프랑스	1.61	0.29	↓
이탈리아	0.18	0.78	↑
영국	0.83	1.97	↑
미국	0.33	1.09	↑
일본	2.20	0.99	↓
한국	2.79	1.56	↓

주: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수 기준.

자료: 김현정(2006).

주요 선진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우리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에 비해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²⁵⁾ 더욱이 서비스산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24.7~80.5%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경쟁력이 약한 여행, 교육, 의료 등 분야에 해외소비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표 26> 주요국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3년, 구매력평가 기준)

구 분	서비스	도소매 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 서비스	교육	의료 복지	기타	제조업
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프랑스	78.9	74.9	69.0	69.2	75.4	101.6	109.1	78.9	79.3
독일	71.2	52.6	71.9	53.5	74.4	94.4	77.6	119.4	62.8
한국	40.9	24.7	54.0	66.1	38.8	63.4	80.5	41.0	63.0

주: 미국(=100) 대비 노동생산성 지수.
자료: 정종인 외(2006).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전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낙후된 전통적인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지식기반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 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완화, 개방도 제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선진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이들 기업과 경쟁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쟁력, 혁신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고급인력 양성

25) 김현정(2006)을 참조할 것.

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률, 컨설팅, 금융 등 생산자 서비스는 세계적인 기업에 비해 매우 영세한 실정이므로, 생산자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 기업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매업,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생계형 서비스 업종을 시설 현대화, 체인화, 전문화, 지역관광과의 연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계업체의 업종전환, 전직 등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경쟁역량 강화

1)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발전단계 측면에서 석유화학, 조선, 컴퓨터, 기계, 섬유 등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성숙기에 막 접어들고 있거나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이 저임금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주력산업과 경쟁상대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7>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비전 보고서

국가·지역	비전 보고서 명
미국	- 미국의 제조업(상무부, 2004) - 전략적 계획(상무부, 2004)
EU	- Manufacture: 2020년을 향한 비전(유럽위원회, 2004)
영국	- 정부 제조업전략(통산부, 2002) - 정부 제조업전략에 대한 검토(통산부, 2004)
일본	- 신산업 창조전략(경제산업성, 2004) - 모노즈쿠리(제조) 국가전략 비전(경제산업성, 2005) - 신경제 성장전략(경제산업성, 2006)

자료: 산업연구원(2005).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비전 보고서를 작성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업은 부품·소재산업, 첨단기술산업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 투자주도형으로부터 혁신주도형으로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우리 제조업을 고기술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주력산업의 혁신을 의미하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²⁶⁾ 여기서 지칭하는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은 차세대 원천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하고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경영활동이나 인력수요가 연구개발, 인력개발, 부품·소재 생산, 판매유통 등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²⁷⁾

우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차세대 원천핵심기술의 개발 등 R&D 투자의 확대와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정부의 R&D 지원을 확대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산·기술·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부문별, 기업부문별로 구인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 제조업 입지와 관련된 제반 여건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장설립 절차나 환경 관련 규제 및 심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하며 중복·상충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26) 오영석 외(2006)를 참조할 것.

27) 장석인 외(2006)를 참조할 것.

2) 부품·소재 산업 육성

세계 각국의 개별 기업들이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소재의 수준이 세계 각국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부품·소재 기업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만한 첨단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품질, 기술 등 비가격 경쟁력이 해외 선진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가운데 대규모의 부품·소재 기업도 부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자동차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소재를 해외,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관리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첨단 핵심기술력을 확보한 부품·소재 분야별 세계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가 만든 부품·소재를 세계 각국으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첨단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 장비, 정보 등에 대해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등과 부품·소재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부품·소재 혁신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보강하여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부품·소재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기업·기술정보, 시장동향, 수요예측, 배송망, 판매망, 수출 마케팅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부품·소재의 기술단계별 정부 역할을 정립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품·소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강화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미흡하고 생산요소투입의 증가세 또한 둔화되면

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R&D) 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으로 볼 때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R&D 투자의 절대금액 측면으로는 선진국의 1980년대 규모에 불과하다.²⁸⁾ 더욱이 혁신 성과나 R&D 효율성은 특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신기술개발도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기술의 개발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기술개발연구의 사업성, 상업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해서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양적 확대도 여전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과 인력활용 등에 있어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연계와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R&D 투자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이 있는 기술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등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주력하고, IT, BT, NT 등의 융합신기술을 개발, 육성,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 융합신기술 등에 대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우수한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려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으로 학습내용을 정비해야 하며,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나 협력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개방화된 경제에서는 국내 자본과 기술만으로 글로벌

28) 우리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는 2007년 3.47%로 2006년 미국(2.62%), 일본(3.39%), 독일(2.53%), 영국(1.78%)에 비해 오히려 높고 1인당 R&D 투자도 695.2달러로 미국(1,146.5달러), 일본(1,162.6달러), 독일(896.3달러)보다는 낮지만 영국(705.3달러)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절대금액 규모면에서는 훨씬 작은 수준이다.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체제에 부합하도록 선진경제 수준으로 R&D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첨단기업과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하여 최신 기술과 지식을 이전 받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북아 R&D 허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4) 금융산업 육성

최근에 올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추세적인 성장률 둔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금융산업의 육성이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 수익성 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이나 효율성 등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5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2008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주요 선진국의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최상위권에 속한 반면 우리는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게다가 홍콩은 기업에 대한 은행신용부문에서, 싱가포르는 주식을 통한 기업자금조달부문에서 각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과 실물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우선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금융자본은 외국자본이나 국내 산업자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으므로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연기금, 국민주방식, 사모펀드, 외국인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금신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28> 2008년 IMD 주요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구 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한국	1위
Banking Regulation	14	21	44	23	3	4	53	노르웨이
Credit	8	35	25	34	1	2	51	홍콩
Stock markets	6	17	28	20	2	1	35	싱가포르
Finance skills	5	26	40	10	6	9	44	스위스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5	25	43	35	2	1	50	싱가포르

주: Banking Regulation: 은행 관련 규제가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
 Credit: 신용흐름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정도
 Stock markets: 주식시장이 기업자금조달에 적절한 정도
 Finance skills: 노동인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은행업무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정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유형의 정책금융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과거 방식의 장기산업금융과는 달리 기술 및 연구 개발, 특허, 영세상공인 지원, 환경보존 등 새로운 정책금융영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를 채워 줄 정책금융기관의 변화가 요청된다. 정책금융기관이 공공금융과 상업금융 행위를 동시에 수행해서 발생하는 상업금융기관과의 불공정 경쟁 등을 개선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업무 중 상업부문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금융기업은 규모별로 대형화, 전문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중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대형화를 도모하고 중소형 금융기업은 전문화나 특성을 살린 고객관리 등을 통해 국내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금융기업이 해외 선진금융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파생상품,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금융신상품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전문대학원 육성, 금융연수 프로그램 강화, 금융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우수한 금융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한다.

VI. 결 론

우리 경제는 최근에 올수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실물경제가 보다 악화되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커녕 2008년부터 다시 1만 달러대로 주저앉은 실정이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과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 규모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개별 국가와 기업의 유동성 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둔화가 연결되면서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향후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9년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 세계경제 전망은 V자형 급반등, U자형 완만한 반등, L자형 장기 침체, 새로운 경제체제 모색 등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전망 자체가 다소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형태의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경제난국에 빠져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바로 선진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경제난국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단기

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위기극복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지지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향후 경제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찾게 되면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 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 보완해서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성장기반 확충의 근간인 자본축적의 제고를 위해 친시장적인 투자유인체계 구축, 규제완화와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기업가정신 강화,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도시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노령층 고용 촉진,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술혁신, 연구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인력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교육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고등교육기관의 직업능력개발기능과 고급인력 양성 역량 강화, 산업과 기업 수요에 입각한 부문별·수준별 인력양성체계 구축, 평생교육훈련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전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추진, 생산자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

거 투자주도형으로부터 혁신주도형으로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차세대 원천핵심기술의 개발 등과 관련된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며,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산·기술·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제조업 입지와 관련된 규제나 심의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실천방안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보유 및 글로벌 공급기지화 구축, 대학, (공공)연구기관, 대기업 등과 부품·소재 기업과의 연계 강화, 혁신기반 확충, 기술개발 및 자금지원 강화,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부품·소재의 기술단계별 정부 역할 정립 등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의 강국이 되기 위해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신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양적 확대, 산학연 연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R&D 투자의 지원규모, 지원기간 조정, R&D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융합신기술 등에 대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대규모 양성,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국제적인 공동연구나 협력연구 강화, 해외 첨단기업과 글로벌 R&D 센터 유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상당 기간 금융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금융산업이 금융위기에 발목을 잡혀 상당 기간 발전할 수 없으므로 우리도 선진국의 금융산업을 따라잡을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요조건이다. 우선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모색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유형의 정책금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업은 규모별로 대형

화, 전문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우수한 금융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한계는 정책보고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장한 정책이나 제시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술적 논거, 관련 연구, 객관적 분석 등이 다소 미흡한 점이다. 따라서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으로 제시된 각 사안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향후 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경제의 사례로 제시한 국가들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곤경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개별 선진경제의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행히도 최근 발표한 정부의 경제운용방향도 본 보고서에서 주장한 방안과 유사하게 위기관리, 미래준비, 경제 재도약으로 연결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 기회로 - 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2008.
-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2005.
- _____,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국민경제자문위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경제보고서, 2006.
- 김기호,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5.
- 김현정,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54호, 한국은행, 2006.
- 문소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05.
- 배상근, 『거시적 관점의 장기전망과 시나리오-』,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산업연구원, 『Korea Industry Vision 2020-』, 한국산업의 발전 비전 2020 국제세미나, 산업연구원, 2006.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정책 출처집』, 산업자원부, 2004.
- 삼성경제연구소,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 전략』, 2005.
- 양동욱·홍승제·이주경·임철제·문소상,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67호, 한국은행, 2003.
- 오영석·이진면·藤川清史, 『개방경제하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선진국 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2006.
- 유경원,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보험개발원, 2008.
- 윤창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전략: 위기를 넘어 선진화로』, 『한국경영학회 2007년도 추계 학술발표 논문집』, 2007.
- 장석인 외, 『2015년 주요 10대 산업별 투자유망 분야 및 투자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산업자원부, 2006.
- 전상인, 『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한국선진화포럼 제22차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2008.
- 정종인·김진용·황문우, 『우리나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 『한은조사연구』 2006-10, 한국은행, 2006.
- 정책기획위원회,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정부 3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 2006.
- 재정경제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대응방향.-,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2005.
- 조 철, 『한미 FTA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2006.
- 청와대 경제수석실, 『잠재성장률 수준 평가 및 대응방향.-, 서면보고자료, 2005.
- 최경수·홍기석,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최경수·고영선,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최숙희·강우란·김정우·예상한,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CEO Information』, 527, 삼성경제연구소, 2005.
- 최숙희·김정우,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CEO Information』, 557, 삼성경제연구소, 2006.
-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8.
- 한국선진화포럼, 『선진한국의 나아갈 길.-, 한국선진화포럼 연구보고서 001, 2007.
-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결과』, 한국은행, 2008.
- _____,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 효과』, 한국은행, 2008.
- _____, 『금융안정보고서』, 2008.
- 한진희·최경수·김동석·임경목,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 한국개발연구원, 2002.
- 황규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인력 양성.-, 『직업과 인력개발』 제9권 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2006.

Allen, F., and D. Gale, “An Introduction to Financial Crises,” *The International*

- Library of Critical Writings in Economics 218*, Edward Elgar Publishing Inc., 2008.
- Bordo, M., B. Eichengreen, D. Klingebiel, and M. Martinez-Peria, “Is Crisis Problem Growing More Severe?,” *Economic Policy*, 2001, pp.53-82.
- CIA, *The 2008 World Fact Book*, 2008.
- Claessens, S., M. Kose, and M. Terrones, “What Happens During Recessions, Crunches and Busts?,” *IMF Workingpaper 274*, 2008.
- Goldstein, M., G. Kaminsky, and C. Reinhart, “Assessing Financial Vulnerability: An Early Warning System for Emerging Market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8.
-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08*, 2008.
- Reinhart, C., and K. Rogoff, “Is the 2007 U.S. Sub-Prime Financial Crisis So Different? An International Historical Comparison,” *NBER Working Paper*, 13761, 2008.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2008.